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 사 경 과 보 고 서

2025. 12.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1. 심사 의안 ····· 1

2. 심사 일정 ····· 1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2

가. 구성경위 ····· 2
나. 활동경과 ····· 3
다. 회의경과 ····· 3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 6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9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9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 10

가. 위원장 인사말 요지 ····· 10
나. 후보자 모두발언 요지 ····· 11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 13
라. 후보자 마무리발언 요지 ····· 38
마. 위원장 마무리발언 요지 ····· 39

5. 종합의견 ····· 40

6. 첨부자료 ····· 44

<참고자료 1> 감사원장(김호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감사원장(김호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부 록> 감사원장(김호철)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서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25. 12. .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1. 심사 의안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2. 심사 일정

가. 임명동의안 제출: 2025. 12. 11.

나. 임명동의안 회부: 2025. 12. 12.

다. 상정 및 청문 일자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5. 12. 22.) 상정

제2차 위원회(2025. 12. 29.) 인사청문회

제3차 위원회(2025. 12. 30.)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가. 구성경위

○ 2025. 12. 1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5. 12. 12. 동 동의안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됨.

○ 2025. 12. 16.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가 있었음.

- 더불어민주당 소속(7인): 김승원, 김기표, 김남희, 백승아, 송기헌, 이기헌, 이연희 위원
- 국민의힘 소속(5인): 정점식, 배준영, 곽규택, 신동욱, 주진우 위원
- 비교섭단체(1인): 이주영 위원

○ 2025. 12. 18.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통지가 있었음.

- 국민의힘 소속 신동욱 위원 사임, 김미애 위원 보임

○ 2025. 12. 22.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정점식 위원(국민의힘)
- 간　사: 김승원 위원(더불어민주당), 배준영 위원(국민의힘)

○ 2025. 12. 22.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통지가 있었음.

-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위원 사임, 박수영 위원 보임

○ 2025. 12. 26.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통지가 있었음.

-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위원 사임, 주진우 위원 보임

나. 활동경과

○ 활동기간: 2025. 12. 11. ~ 12. 30. (20일 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2025. 12. 11. ~ 12. 21. (11일 간)

- 제1차 위원회(2025. 12. 22.)

○ 인사청문회 실시

- 제2차 위원회(2025. 12. 29.)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제3차 위원회(2025. 12. 30.)

다. 회의경과

○ 2025년 12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함.

○ 12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함.
-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함.
-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함.

○ 12월 29일 제2차 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 위원장의 인사와 감사원장 후보자 김호철의 선서 및 모두발언에 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위원별로 7분)를 실시하고,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위원별로 7분)를 실시한 후,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위원별로 5분) 및 재추가질의(위원별로 5분)를 실시함.

○ 12월 30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한 심사경과보고서(안)대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경과

차수	일 시	의사일정	심사경과	장 소
1차	2025. 12. 22. 09:3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4.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선임 - 국민의힘 정점식 위원 ○ 간사 선임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 -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 ○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함. ○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함.	제3회의장 (본관 245호)
2차	2025. 12. 29. 10:00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2.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위원장 인사말 ○ 감사원장 후보자(김호철) 선서 및 모두발언 ○ 감사원장 후보자(김호철)에 대한 인사청문 -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위원별 7분) -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위원별 7분) -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위원별 5분) - 후보자에 대한 재추가질의(위원별 5분)	제3회의장 (본관 245호)
3차	2025. 12. 30. 10:00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2.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제3회의장 (본관 245호)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1) 교섭단체별 요구 현황

(단위: 건)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개혁신당)	비 고
763	265	399	99	**753건**(위원회 의결)+ **10건**(재적 1/3 연서)

※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인청법 제12조제2항)
- 인청특위 1차 회의(12. 22.)에서 위원회 의결로 12. 24.(수)까지로 제출기한을 정함.
- 재적위원 1/3이상(곽규택 위원 등 5인) 요구(12. 24.(수))로 제출기한을 12. 26.(금) 16시까지로 함.
" (12. 26.(금))로 제출기한을 12. 27.(토) 18시까지로 함.

(2) 대상기관별 요구·제출 현황

(기관명 수, 단위: 건)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1	감사원	240	166	35	39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우려
2	강원대학교	2	2	-	-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1	3	-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4	경찰대학교	2(-)	-	-	-	- 경찰청 이첩
5	경찰청	56(58)	32	19	7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해당자료 부존재
6	고려대학교	3	-	3	-	- 해당자료 부존재
7	고용노동부	6	6	-	-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4	-	-	
9	관세청	22	2	6	1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비소관사항
10	광진구청	1	1	-	-	
11	교육부	44	8	19	17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12	국가보훈부	3	-	-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3	국가인권위원회	3	1	-	2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4조제1항
14	국민건강보험공단	28	2	1	25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5	국민권익위원회	2	2	-	-	
16	국민연금공단	27	21	6	-	- 해당자료 부존재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7	국방부	18(12)	11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18	국세청	56(59)	43	12	4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비소관 사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19	국토교통부	36	1	-	35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20	근로복지공단	4(5)	5	-	-	
21	금융감독원	37	6	31	-	- 해당자료 부존재
22	금융위원회	7(2)	-	2	-	- 해당자료 부존재
23	기후에너지환경부	5(8)	8	-	-	
24	농림축산식품부	6	2	4	-	- 해당자료 부존재
25	대법원	16	16	-	-	
26	대한상사중재원	1	1	-	-	
27	대한적십자사	5	2	-	3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1	-	-	
29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1	1	-	-	
30	법무부	28	10	18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해당자료 부존재
31	병무청	10(16)	1	14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2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1	-	1	-	12.24.(수) 18시까지 제출 필요 (위원회 의결로 요구)
33	산업통상부	3(-)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첩
34	서초구청	1	1	-	-	
35	원자력안전위원회	14	14	-	-	
36	인사혁신처	3	3	-	-	
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	3	4	1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38	한국고용정보원	-(1)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39	한국과학창의재단	1	-	-	1	- 해당자료 부존재

연번	기 관	요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미제출 · 부분제출 사유
4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1	-	-	
4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1	-	-	
42	한국수력원자력㈜	4	4	-	-	
4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2	-	-	
44	한국은행	8(13)	1	-	12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해당자료 부존재
45	한국토지주택공사	1	1	-	-	
46	행정안전부	27	8	4	15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비소관사항
합 계		763 (768)	395	182	191	

※ ( )안의 숫자는 요구받은 기관에서 재분류하거나 이첩(타 기관으로 이첩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받은 건수)된 자료의 건수로, 이를 토대로 제출·미제출 건수를 계산함.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서면질의서 474건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7인)	김승원	김기표	김남희
	백승아	송기헌	이기헌
	이연희		
국민의힘(4인)	배준영	곽규택	김미애
	박수영		
비교섭단체(1인)	이주영		

※ <부록> 감사원장 후보자(김호철) 서면질의답변서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구두질의요지서 (7인)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5인)	김승원	김기표	백승아
	이기헌	이연희	
국민의힘(1인)	배준영		
비교섭단체(1인)	이주영		

4.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가. 위원장 인사말 요지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과 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법률이 정한 기관의 회계를 감사하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국가회계질서 및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헌법기관임.

○ 이러한 감사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해서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요구됨.

○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 책임성 및 국가관,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감사원장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이 있는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수호의지를 갖고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람.

○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여·야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후보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감사원장인지를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청문회에 출석하신 김호철 후보자께도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감사원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

나. 후보자 모두발언 요지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림.

○ 저는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환경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원 활동을 통해 환경과 인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공익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윤리강령이 지시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어 왔음.

○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국가 행정 영역에서 시민의 관점을 결합시켜 국민의 생명·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일하기도 했음.

○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감사원장직 제의를 받게 되었음.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큰 영광이었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감사원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게 됨.

○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소신으로 공익을 위해 힘을 보탰던 경험을 살려 감사원, 나아가 공직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어보고자 감사원장직을 수락하였음.

○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가치인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야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 또한 과도한 정책감사·강압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서로 간에 분열의 아픔도 겪고 있음.

○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외적으로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내적으로는 감사원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겠음.

○ 우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음.

○ 다음으로,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음.

○ 다음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적극 추진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마지막으로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겠음.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1) 감사원장의 직무 및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감사원장 수락 이유는?	○ 30년 넘는 변호사 활동기간 동안 공익 실현을 위해 노력했고, 다양한 시민적 시각을 갖춘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공직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 감사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임.
○ 감사행정의 최고책임자이자 부총리급의 국가기관으로서 올바른 국정 운영을 위하여 건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 말씀을 유념하고, 살펴보겠음.
○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가 해당 상황을 확인하였는지?	○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음.
○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왜곡된 감사를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공격하고, 공직사회를 복지부동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 나아가 전임 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음.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지난 과오를 반성	○ 후보자의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의 발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만, 감사원은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가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해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할 예정인지?	
○ 감사원의 구성원이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한 것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 발언에 늘 조심하고 엄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해당 감사위원은 현직 감사위원으로 후보자가 그 발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은 외관상으로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 회원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하였는데, 국가정책의 결정·집행·감사 등에 같은 민변 출신이 포진해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 타 공직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민변 출신 인사들의 비위행위 및 부적절 행위 등이 빈발하고 해당 집단이 권력화되었다고 보는데,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비위행위 등의 주체가 민변 구성원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고, 개별 거취에 대해서는 민변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림.
○ 민변 회장 역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민변은 나에게 삶의 등불이다라고 표현도 하였는데, 우리 사회의 약자는 목소리 내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목소리가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낙태나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인권백서 발간에 대해 침묵하였는바, 반드시 정치적	○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대해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중립성과 독립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민변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점을 의심받고 있고, 민변의 회장을 역임하였다는 것은 민변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민변이 왜 정치적 편향 논란에 오른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 개인의 생각을 말해 주시기 바람. 또한, 환경, 에너지 및 인권 등에 대한 답변과 달리, 내란 전담 재판부, 검찰 개혁, 공수처, 정보통신망법 및 최근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을 아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개인적 소신을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며, 민변 회원 출신이었던 분들이 공직에 진출한 사실은 맞지만 민변 회원으로서 진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또한 입법 정책적인 사안이라든가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기관의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진보 정부에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지향점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이며, 정파적 성격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민변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법률가 단체이며, 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회원들의 입장임.
○ 월성 원전 감사, 권익위원장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 무죄판결 사례가 많은데, 무죄받은 공무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감사원장으로 취임 후에 감사원을 대표해서 사과할 용의 있는지?	○ 말씀하신 취지와 또 그동안의 운영쇄신 TF의 점검 결과를 잘 살피면서 감사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겠음.
○ 민변은 내 삶의 등불이라고 말한 취	○ 민변 회장이 되고 민변 회원들에 대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는?	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린 것임. 민변이 지향하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존중하고 지키고자 노력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
○ 민변에서 최근 허위 조작 정보 금지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음. 본인의 소신은 무엇인지?	○ 최소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인권 침해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론에 동의함. 민변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원칙에 의해 활동하고 있으므로 그 일환으로 발표된 것으로 생각함.
○ 민변이 공익적 활동으로 인권존중에 이바지한 부분 있으나, 제주 해군 기지 반대, 사드 설치 반대, 북한 인권 침묵 및 광우병 사태 동조 등 국민 갈등 국면에서 국가적 예산 낭비와 손해를 초래하기도 하였음. 감사원은 국가 안보와 국가 기관에 관련된 감사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임.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지?	○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쳐서 그 입법의 방향이 결정되는 게 옳다고 생각함.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신과 양심보다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자각하면서 중용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임.
○ 2016년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관련하여 민변이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다르게 국정원이 납치하였다는 이견을 제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	○ 당시 민변 내 TF에서 그러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으나 각하·기각된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민변 회장이던 후보자의 견해는?	
○ 후보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는데, 당시 회의록을 보면 스스로도 기술적인 이야기를 잘 모른다고 발언한 바 있음. 또, 후보자는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신한울 1호기 운영을 반대하며 울진공항의 비행기 추락사고 위험을 이유로 들었는데, 울진공항이 군용공항임을 고려하면 적절한 지적이었는지? 전문적 지식 없이 공직을 맡았던 게 아닌지 의심스러움.	○ 확인해 보겠음.
○ 신고리 4호기의 가동에 대하여는 찬성하였던 것 아닌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 원자력안전법상의 안전성평가기준을 토대로 판단하였고, 안전성 증진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음.
○ 감사원장 퇴임 후 다시 변호사 할 것 아닌지? 퇴임 후 이해충돌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현재로서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임기 동안 헌신할 것만 생각하고 있음. 지적을 유념하겠음.
○ 최근 내란 사태의 함의와 민주주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명확한 의견을 낸 기록이 남아있음. 그렇다면 감사원장이 되었을 때 앞으로 감사원이 정치적인 중립이나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는지?	○ 그 기고문은 시민의 입장에서 학술적·법리적 차원에서 정리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내란사태와 관련해 쓴 칼럼의 내용과 같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삼권분립의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주장은 삼권분립에 부합하는 것인지 위배되는 것인지?) 또한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정치적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또한 잠재적 독재의 논리로서의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칼럼은 당시 연구했던 내용이며,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편적이라고 생각함. 민주주의는 수직적으로 국민의 권한 위임 관계가 있고, 수평적으로 삼권분립 등의 제도가 있음. 다만, 후보자 입장에서 정치적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감사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원칙적으로 동감하며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제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정권의 생각과 상관없이 시민의 참여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킬 필요 있음. 감사원장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음.
○ 후보자의 지위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말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음.	○ 가정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정치적 논의에 대한 의견은 적절하지 않음.
○ 금년 9월 이후 기획재정부 7명, 감사원 5명 등 33명의 1급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법률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겠음.
○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한	○ 정부의 공식 발표를 신뢰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후보자의 입장은?	
○ 최근 중국공산당원이 미 항공모함 촬영 및 군사기밀 유출사건 등에 대하여 간첩죄 적용이 불가하였음. 여야는 당시 간첩죄 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민주당이 신중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리고 민변이 반대하면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간첩혐의자 인권을 챙긴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 영토는 대한민국에 포함되어 있음. 탈북하여 남한으로 온 북한 거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공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세라고 볼 것임.
○ 북한주민은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국민임이 분명하나 UN 동시 가입, 남북협력 등에 따라 사실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특히나 감사원장의 역할이 북한인권운동은 아니므로 이를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감사원장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는 자리이므로,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질의에 답하고자 노력하겠음.

(2) 감사원 소관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새 정부 출범 이후 운영쇄신TF의 활동에 따라 특정 인사의 위법 행위 등을 공식 확인하였는지?	○ 언론에 발표된 내용 위주로 파악함.
○ 운영쇄신TF의 구성원 중 고압감사, 표적감사를 실시한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적절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후보자 입장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가정적인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정원과 감사원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조사 후 고발을 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 이후 국정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였음. 감사원에 대해서도 그러한 지시 내지 요청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 감사결과와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7인 감사위원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존중할 필요 있음.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쇄신TF의 운영과정에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관여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꼭 유념해서 그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음.
○ 감사원 운영쇄신TF 결과를 보면 감사원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전산조작 및 기밀유출 등을 하였음. 명백한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또한, 감사원장에 취임하면 감사	○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실추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정치 감사와 감사의 정치화가 문제라는 취지를 유념하고,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내부적으로는 감사관들의 사기와 화합을 달성하는 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원 직원들의 상처난 자존심과 열패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함.	진력하도록 하겠음.
○ 관저공사를 수주한 21그램이 김건희와 긴밀한 관계라는 점이 알려져 있는데, 김건희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 있지 않은지? 또한 위법·부당한 조사 및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감사원법 제39조에 따라 직권 재심의의 대상 아닌지?	○ 그런 의혹이 있고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살펴보겠음. 직권 재심의는 감사결과의 오류와 잘못이 있을 경우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장이 된다면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음.
○ 운영쇄신TF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봐주기 감사였다는 결론이 제시되어 있음. 특히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핵심 업체인 21그램만 서면조사를 지시한 이유 등도 감사원에서 밝혀낼 필요가 있음. 또한 특검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와 21그램 김태영 대표를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하였음. 이러한 허위 답변도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서면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임. 후보자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취임할 경우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경위를 규명할 것인지?	○ 운영쇄신TF가 발표한 내용을 알고 있으며, 현재 국회 감사요구로도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감사원장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우려를 유념하고 잘 살펴서 국회 감사요구가 신속히 기한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음. 또한 운영쇄신TF가 사실관계를 살폈는지 보겠음.
○ 운영쇄신TF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 운영쇄신TF에서 개선을 위한 여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 취할 것인지?	가지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좀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후속으로 감사원에서도 감찰 부서의 활동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장이 되면 관련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음.
○ 지난 정부에서 실시된 7대 감사결과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었는데, 이에 개입한 특정 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 위원님의 질의 취지와 우려 유념하겠음.
○ 감사원내 특정 인사와 가까운 직원들이 핵심 보직, 해외 유학 등의 특혜를 받았는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 감사원 내 파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감사원장이 되면 잘 살펴보도록 할 것임. 내부자정과 감찰기능을 강화해나가며 질의사항을 유념할 것임.
○ 국가기관의 권력은 인사권에서 나온다고 생각함.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장악한 결과 사조직이 운영되기까지 하였음. 감사원장 취임하면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함.	○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 현직 감사위원에 대해 평가할 입장이 아님. 다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최고 감사기구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펴보겠음.
○ 감사원의 개혁, 정치감사 피해에 대한 백서 제작 등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힘써주고, 잘못된 감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도 책임을 추궁해야	○ 말씀을 유념하여 정치적 중립성 강화, 내부 자정 기능 제고 등에 노력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할 것임.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에는 496억원으로 제시했지만, 832억여원으로 2배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낭비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 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 이전 대상 부지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고 무리한 예산 전용 또 각종 은폐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알 권리 있지 않은지?	○ 당시 발표와 실제 예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맞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활용했기 때문임. 디지털 포렌식은 영장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감사원은 내부 지침에 의하여 영장없이 원본 전체를 제출받고 있음. 종전에는 사전에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였고 보충성도 인정되어야 했으나, 2020년도에 이러한 요건이 삭제되며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선 필요가 있음.	○ 자료제출 요구의 일환으로 내부지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포렌식 제도의 남용에 대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감사원법에 명문화하고 절차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감사원 사무규칙에는 고발 외에 수사요청을 하거나 수사자료를 보낼 수도 있게 되어있음. 포렌식 자료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사기관	○ 문제가 있다는 점 공감하며, 개선 필요성 있음. 법률 위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잘 정비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은 감사원을 통하여 영장없이 디지털 자료를 획득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되는데,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지?	
○ 운영쇄신TF에 디지털 포렌식을 최대한 좀 자제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감사원장 후보자도 그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라고 하였음. 그런데, 총리실 주재의 헌법수호TF에서는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여 사실상 제출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임. 총리실은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고 감사원은 포렌식을 안 한다고 하면 상호 모순적인 것 같은데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정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 디지털 포렌식 남용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음. 헌법수호TF는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고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임. 다만 말씀 취지에는 공감하며 감사원장이 된다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잘 살펴보겠음.
○ 지난 정권에서 감사 시 반복적 소환, 감사과정에서 인격모욕 등 인권침해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많이 나왔는데 인권 보호적으로 감사할 필요 있음.	○ 운영쇄신TF에도 관련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유념하도록 하겠음.
○ 감사결과에 의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권교체 등을 이유로 취소하면 감사원의 신뢰가 훼손될 수	○ 선례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으나, 재심의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있음.	
○ 2025년도 갤럽 시사인에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감사원이 매우 낮은 수준임. 2021년도에는 2위였으나 하락한 결과임. 근본원인은 감사원이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감사, 보복감사, 강압감사를 하였기 때문임. 감사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의하여야 하는데 해당 규정이 사문화된 것인지? 국민권익위원회, 월성원전 한국수력원자력, 부동산통계원의 직원 등으로부터 강압적·모욕적인 감사에 관한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 등이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강압적·모욕적 감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 감사원으로서는 이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은 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 또한 공무원에 대해 부적절한 인권침해적 감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대표적으로 정치 감사, 보복 감사, 강압 감사를 한 유병호 감사위원이 아직도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는지?	○ 현직 감사위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감사위원은 법률이 보장하는 신분을 갖고 있음.
○ 국민들이 감사원에 기대하는 바는 정치감사에서 벗어난 정치적 중립, 권한남용 방지 등이고, 이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표방한 바임.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임 후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국민들이 놀란 바 있고, 지	○ 감사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유념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난 정권에서 감사원이 마구잡이 감사를 하였는데 이런 적이 없음.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원장결재만으로 무조건 자료를 수사기관에 보냈고,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병호 사무총장 결재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보낸 바 있음.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서신은 정권에 따라 그 감사 방향이 상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도 이런 지휘서신이 가능한지?	
○ 영장없이 일반적으로 포렌식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임. 무분별한 감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보내는 것은 큰 문제임. 기존 감사원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디지털포렌식의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제화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하겠음.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TV 보도를 보고 감사 착수를 결정하여 사무총장 취임 즉시 감사에 착수하였다고 함. 해당 감사에서는 본 감사 전에 내부규정에 따른 다수 포렌식 실시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담당자는 고속승진하였음. 대상자가 유병호 감사위원과 가깝다고 하는데,	○ 보고받지는 않았고, 운영쇄신 TF의 언론 보도를 통하여 대강은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를 보고받았는지?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경우 검찰의 25개 공소사실 모두가 무죄판결되었음.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고발하였던 것인데, 최근 국정원의 고발 취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백한 허위사실을 정치적인 의도로 고발한 것이라면 국가기관에서 고발을 취하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국정원이 신중한 판단하에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함.
○ 당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이 이루어졌으므로, 감사원도 재심사하든지 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감사원장이 된다면, 감사위원회에서 살펴보겠음.
○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관한 2025년 12월 26일 판결은 감사원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임.	○ 유념하겠음
○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은 북한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이 방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근 이루어진 판결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결과를 뒤집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 운영쇄신TF 조사 결과와 관련된 전임 감사위원의 사과는 권익위, 산업부 월성감사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음.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시기별로 달라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국회 소속으로	○ 어떤 부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해져야 될 사항이 있음. 그 과정마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두거나 독립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동시에 수행하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직무감찰이 사실상 표적 감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직무감찰을 감사원이 직무에서 제외하거나, 주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음.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감사원의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함. 개혁 방안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통제를 보다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임. 또한,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겠으며, 내부 감찰 기구의 개편도 고려하고 감사의 방법도 책임 추궁식 과도한 정책 감사보다는 성과평가 중심의 감사로 전환해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권 친화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잘 실현하겠음.
○ 감사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총 6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음. AI 교과서 도입은 주요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이주호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강행한 사업이었으며, 활용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소 서둘러서 도입을 발표하여 교육현장에 혼란을 빚었고 AI 교과서 활용도가 대단히 낮다고 보고한 걸로 알고 있음.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책이 수립되는 게 옳다고 생각함. 다시 한 번 사안을 잘 살펴보면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살피고 시정하도록 고민하겠음.
○ 정책감사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킨다는	○ 과정에 있어서의 부패나 불법 행위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유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책임없는 행정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대해서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정책은 회계와 직무가 결합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의 낭비나 문제가 있다면 변상 판정 등을 통해 국고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안을 잘 살펴가면서 방안을 강구하겠음.
○ 헌법은 감사원이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도 마찬가지임. 결국 감사원은 감사위원들의 합의체 기관이라는 것임. 그러나 지금 감사는 원장과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감사위원회의의 권한을 실질화 하는 것이 지금 감사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감사원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감사원이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운영쇄신TF에 그러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확립하는 것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또한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함.
○ 연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 대상을 정해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장의 결정에 따라 감사하겠다고 하고 사무총장 지휘에 의해 감사가 실시되고 있음. 어떤 사항을 감사할 것인지 그 감사위원회가 기본적인 결정을 할	○ 감사위원회 의결로 세워진 연간 감사계획에 없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수 있어야 되고 감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권익위원장 사례를 보면 감사위원회를 패싱하고 사무총장이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서해 공무원 실종사건 관련 북한군이 코로나 우려로 바로 구조하지 않고 방치하였는데 이러한 사건에 편파 감사가 있기 어려움.	○ 운영쇄신TF의 점검 대상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결과의 번복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함.
○ 감사위원들도 이번 정부에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감사결과가 바뀌게 되면 감사원 감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서 고발한 경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점에 대해서 원칙론을 고수해 줄 것을 요청함.	○ 감사결과가 쉽게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함. 사안과 관련이 있는 판결의 내용과 이유 또 감사 그동안의 어떤 감사과정과 결과를 감사원장이 된다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음.
○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타이거파 관련 보고 받았는지?	○ 보고받은 사실 없음. 감사원 행동윤리 강령에 반함. 파벌은 엄금되어야 함.
○ 간부급 직원의 여성비율 적정수준 유지는 중요한 문제이나, 감사원은 타 중앙행정기관 대비 현저하게 저조한 10% 수준에 머물고 있음. 조직의 유연성 등을 위해 여성비율 확대를 위	○ 알지 못함. 여성비율 확대 등 성평등 관련 의견에 동의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감사원의 개방형 직위는 5개 직위 수준으로 이를 과감하게 확대하여 수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 감찰관 등 특정직위는 현재도 개방형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정도의 고민은 없었으나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음.
○ 첨단산업(바이오, AI) 발전에 필수적인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제도의 활성화와 면책기준 개선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의지가 있는지?	○ 현행 감사원 규칙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 보겠음.
○ 4대강 사업은 5차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매 감사마다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바 있음.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된다면 또 감사할 생각이 있는지?	○ 후보자로서는 답변할 사안이 아니나, 감사의 개시 원인이 달라서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됨. 또 감사를 할 것인에 대해 개인의 생각이 독단적으로 반영될 수 없다고 봄. ○ 4대강과 관련한 그 간의 감사는 쟁점을 달리하는 감사였다고 보이고, 현재로서는 또 감사를 할지에 대해 답변하기 적절치 않음.
○ 문재인 정부 시절 100조원을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였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98조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였음. 차이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의 결산 감사도 가능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도 결산을 수행하지만 충분하지 못하여 감	○ 세수와 추계의 불확실성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데에는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음. 다만, 감사원 결산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취임한다면 살펴보겠음. 말씀하신 국회 결산 지원에도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원의 협조가 필요함.	
○ 감사원의 종전 공직비리 적발실적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사안을 적발하는 경우 높은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감사 기간이 늘어나고 공무원을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임.	○ 유념하여 쇄신 방안을 고민하고 강구하겠음.
○ 체계에 맞지 않는 무리한 감사들이 그동안 벌어졌는데, 독립기관에 걸맞는 감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쇄신할 필요가 있음. 정책집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임.
○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현재 원장 또는 사무총장 전결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현행 수사의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함.

(3) 공직후보자로서의 적합성 및 도덕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치후원금 490만원 내역과 중앙선관위에 기탁한 300만원은 특정 정당을 정하지 않고 기탁한 것인지?	○ 총 490만원 중 190만원은 소액 후원하였으며, 300만원을 정당을 정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에 기탁한 것으로 기억함.
○ 2014년부터 1년 동안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사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400만원을 자문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회당 자문료 및 출석 횟수 등에 대해 과도한 것이 아닌지 자료제출 필요.	○ 정확한 액수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로 살펴보겠음.
○ SK하이닉스 자문위원 활동 중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 당시 활동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 발생과 같이 SK하이닉스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에 따라 작업환경과 병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음. 당시 법률전문가로서 SK하이닉스 재직 중 발생한 대다수의 병에 대해 지원 보상체계자료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가장 보람있었음.
○ 2006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이었고 해당 직위도 공직에 해당하므로 20여년간 공직자로서 살아온 것인데, 상식적인 수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할 필요.	○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최선을 다해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하였음. 다만 사생활 및 건강정보 관련해서 제출이 어려웠고, 두 자녀와 관련해서는 성인이고 독립생계에 준하는 활동을 하기 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문에 개인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동의를 받기 어려웠음.
○ 2014년도에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자문위원이었는데 최근 10년간 SK하이닉스 주식 취득한 경우가 있었는지?	○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았고, 최근 자산운용상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취득하였음.
○ 재단법인 숲과 나눔의 이사를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서 운영하는 곳인지?	○ SK하이닉스가 출연을 했지만 설립 이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SK하이닉스는 관여하지 않아서 산업 보건 안전을 위한 완전히 독립된 재단임.
○ SK하이닉스 외부자문위원 활동 시 용역 제공한 것에 관한 용역비는 1억 2천만원인데, 관련 용역보고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기부금 내역 관련하여 정치인 관련 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최근 5년치라도 신속하게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해주기 바람.	○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으로도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하여 제출하지 않았던 것임.
○ SK하이닉스 관련 자문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2014년도에 SK하이닉스 반도체직업병 발생에 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사측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는 산업보건검증위원회가 구성되었었는데, 당시 법률전문가로서 참여하였음. 작업환경 조사·평가, 작업환경과 직원의 질병발생과의 인과관계, 작업환경 개선방안, 지원보상 체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마련 등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그 연구용역자료가 외부에도 공개된 바 있음.
○ 민변 소속 변호사 중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담당한 변호사들이 그 업무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십억의 수임료를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이 났음. 알고 있는지?	○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면소판결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기억 안남.
○ 그 밖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이후 관련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사건 수임을 독식한 것도 문제된 바 있음. 후보자도 본인이 담당한 사건을 수임한 바 있는지?	○ 없음.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이 되었을 때에는 월성 1호기 관련 사건에 대하여 회피하였었는지? 회피하였다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회피한 바 있음.
○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내역을 보면, 1997년 전국 장애인 한가족협회 담당 변호사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표시 위한 가처분 소송을 수행하였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TF 부단장 활동을 하며 일제 강	○ 장애인 복지법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이 선거 방영에 있어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료변론하였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가 배상청구의 기반 마련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담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대리인으로 참여한 바 있음. 후보자가 그동안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그리고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이끌어내었다고 평가함.	있으며, 일본군 성노예 명예 회복을 위해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하였음.
○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보고서, SK하이닉스 주식 취득 시기, 정치후원금 내역 관련자료 및 전북교육감 지방선거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서도 공개할 필요 있음.	○ 김승환 교육감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활동을 같이 해서 위원장을 모시고 찾아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공직 선거자 후보 응원 차원에서 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함.
○ 장모 소유의 서초동 아파트에 전세 5억원에 살고 있는데, 가족간 거래로 8년 4개월째 전세가액이 동결중이고, 인근 시세는 9~10억 수준임. 증여세 납부했는지?	○ 지명 후 임명동의 전에 증여세 납부하였음.
○ 강남 전월세 폭등으로 힘든 상황인데, 장모 소유의 주택에 8년 동안 전세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음. 감사원장 후보자는 어느 공직자보다도 엄격한 기준 적용되어야 하는	○ 당시 장인의 병세를 돌보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모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감. 전세로 들어가면서 이전 전세자에 비해 전세금을 올렸고, 임차인 사정에 따라 장기간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증여세 납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 표명 필요.	있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취지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이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 사건이 몇 건인지 아는지? 2023년 이후 감사원의 외부 소송 위임 6건 중 4건을 클라스한결이 담당하고 있음.	○ 다른 사업 파트 다른 구성원 변호사가 수임한 것이어서 알지 못하다가 임명동의 과정에서 알게 되었음.
○ 후보자가 재직중인 법무법인의 경우 별산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감사원 관련 사건 수임 여부를 후보자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답변이 타당하다고 봄.	○ 합병을 하였으나, 구분하여 운영함.
○ 대한민국국민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이재명정부에서는 고환율의 원인으로 해외주식투자를 지적하였는데, 해외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거래의 자유가 있는 부분이고 존중되어야 할 것임.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잘 모르겠음.

라. 후보자 마무리발언 요지

○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여러 고견과 따뜻한 충고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지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직무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음.

○ 아울러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감사원에 거는 기대와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요하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음.

○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감사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께 신뢰받는 감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조언은 모두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가슴 깊이 새기겠음.

○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주신 정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림.

마. 위원장 마무리발언 요지

○ 우리 위원회는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김호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이 후보자께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하셨음.

○ 이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견해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를 대변한 것임.

○ 김호철 후보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5. 종합의견

○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감사원장 후보자(김호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답변자료,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구두질의와 답변 등을 토대로,

① 감사원장의 직무상 독립성 및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 ② 정책감사 및 감사 과정의 디지털 포렌식 등 감사원 소관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③ 공직후보자로서의 적합성 및 도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증하였고,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의견이 제기됨.

○ 먼저, 일부 청문위원은

-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인권·환경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으며 30년이 넘는 변호사 활동기간 동안 공익 활동에도 충실하였고, 부동산 투기 및 주식 관련 부정거래 사실이 없고 후보자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관련 의혹도 전혀 제기된 적 없는 등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 개인적 소신보다는 공적 지위에 맞는 국익 중심의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원을 쇄신하여 전 정부 감사원에서

심하게 훼손되었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상 독립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점,

- 그동안 감사원의 디지털포렌식 절차·내용이 내부지침에 의해 현저하게 완화되면서 영장없이도 원본 전체를 제출받는 등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감사원법에 명문화 하는 등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제도에 대한 개선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점,

- 내부 감찰제도 개편과 감사위원회의 합의제 운영 강화 등 감사원 개혁방안에 공감하는 한편,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이전 사안 등 운영쇄신TF에서 지적된 기존 감사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인권 침해적 감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었다는 점,

- 청각장애인의 선거토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건 무료 변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등 오랫동안 공익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

-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후보자는 76%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며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였고[763건 중 574건 제출(제출 395건, 부분제출 191건)], 회의 중 일부 위원이 추가요구한 배우자의 자료제출 요구 내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제출하였다는 점,

- 공직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활동시기, 신고리 4호기 재가동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의 의견보다 공적인 업무를

더 우선시 한 결정을 내려, 공직자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 공직선거의 후보자 개소식 참석과 같은 기존 정치적 활동에 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면과 구두질의에 없다고 답하다가 후에 이를 인정하였고, 외부자문위원 재직 중 수령한 대가, 병적기록 및 외환거래 내역 등 위원들의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요구가 있은 후에야 제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검증할 수 없었고, 특히 정치후원금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끝까지 밝히지 않아 정치편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 후보자가 과거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특정 법률가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구성원들이 다수 공직에 진출하였고, 후보자 자신도 계엄 이후 기고한 글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점,

- 최근 중국공산당원이 미 항공모함 촬영 및 군사기밀 유출 사건 등

이 있어 간첩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북한 주민의 헌법 상 지위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답변에 그쳐 안보관과 이념 편향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점,

- 후보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현재 거주 중인 장모 소유 아파트에서 8년 4개월간 전세금 인상 없이 시세 절반 가격을 유지하며 탈루해오다 인사청문을 앞두고 뒤늦게 납부한 점,

- 감사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을 후보자가 근무해 온 법무법인이 다수 수임한 것을 고려시(6건 중 4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점,

- 후보자가 관련 사건 수임 경력 토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중 원전 재가동 사안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발언시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6. 첨부자료

<참고자료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자료 2> 감사원장(김호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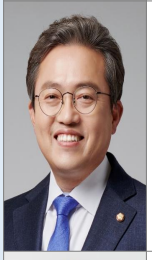
<부 록> 감사원장(김호철) 서면질의 답변서

참고자료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국민의힘			
			**정 점 식** (65년생, 경남 통영시고성군) · 3선(20 · 21 · 22대) · 서울대 법대 및 동 대학원 법학 석사 · (전)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 · (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현)국민의힘 사무총장 **· (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관 714호 784-6327 6788-7216 F)6788-7220

2025. 12. 26. 현재

더불어민주당 (7)	간 사		**김 승 원** (69년생, 경기 수원시갑) · 재선(21 · 22대) ·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전)수원 · 전주지방법원 판사 · (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 (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회관 928호 784-5285 6788-6236 F)6788-6240
			**김 기 표** (72년생, 경기 부천시을) · 초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전)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수석검사 · (전)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 (현)민주연구원 이사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324호 784-4840 6788-6061 F)6788-6065
			**김 남 희** (78년생, 경기 광명시을) · 초선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전)제42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변호사 · (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부교수 · (전)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 및 대변인 **·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회관 738호 784-6195 6788-6731 F)6788-6735
			**백 승 아** (85년생, 비례대표) · 초선 · 춘천교육대 초등교육학과 졸업 · (전)강원교사노조위원장 · (전)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 · (전)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현)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회관 835호 784-8570 6788-6616 F)6788-6620
			**송 기 헌** (63년생, 강원 원주시을) · 3선(20 · 21 · 22대) ·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관 535호 784-6150 6788-6641 F)6788-6645
			**이 기 헌** (68년생, 경기 고양시병) · 초선 · 경희대 무역학과 졸업 · (전)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 (전)문재인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회관 1020호 784-5750 6788-6636 F)6788-6640
국민의힘 (5)	간 사		**배 준 영** (70년생,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21 · 22대)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및 미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 (전)국민의힘 사무총장 · (전)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관 829호 784-5087 6788-6546 F)6788-6550
			**곽 규 택** (71년생, 부산 서구동구) · 초선 ·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 (전)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 (전)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528호 784-5970 6788-6711 F)6788-6715
			**김 미 애** (69년생,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21 · 22대) · 동아대 법학부 졸업 · (전)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인권위원장 · (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회관 716호 784-5680 6788-6146 F)6788-6150
			**주 진 우** (75년생,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전)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전)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 (전)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 (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회관 339호 784-9423 6788-7271 F)6788-7275
개혁신당 (1)			**이 주 영** (82년생, 비례대표) · 초선 · 울산대 의학 석사 · (전)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 · (전)개혁신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 (현)개혁신당 정책위의장 **·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회관 538호 784-3457 6788-7221 F)6788-7225
더불어민주당			**이 연 희** (66년생,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 · 중앙대 철학과 졸업 · (전)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회관 319호 784-4380 6788-6831 F)6788-6835

참고자료 2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2025. 12.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감사원장(김호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목　　적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2. 안　　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 실시일

2025. 12. 29.(월) 10:00

4.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신문, 보충질의·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행한다.

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과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있는 경우 신문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국가 안전보장 등)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5조(공직후보자 등의 보호)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마. 기타 인사청문회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심사경과보고서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소요경비

인사청문회활동비 및 증인여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8.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o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국회전자게시판에 공고한다.

나. 언론관계

o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은 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의 실시·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인사청문회 방청

o 일반방청은 방청권 소지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라. 질의 중 영상매체 사용

o 음성·음향이 포함되지 않은 영상물은 별도 절차 없이 질의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음성·음향이 포함된 영상물은 사전에 간사간 합의와 위원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붙임 1]

의 사 일 정

일 시	안 건	비 고
<제1차> 25. 12. 22.(월) 09:3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4.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6.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필요시)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2차> 25. 12. 29.(월) 10:00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필요시 당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제3차> 25. 12. 30.(화) 10:00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장소: 국회 제3회의장 (본관 제245호)

※ 의사일정, 회의일시, 장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2025. 12. 29.(월) 10:00

3.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

2025년 12월 24일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정 점 식

제26대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서면질의 답변서

2025. 12.

감 사 원

목 차

■ 곽규택 위원 ····· 1

■ 김기표 위원 ····· 57

■ 김남희 위원 ····· 100

■ 김미애 위원 ····· 113

■ 김승원 위원 ····· 225

■ 박수영 위원 ····· 246

■ 배준영 위원 ····· 303

■ 백승아 위원 ····· 341

■ 송기헌 위원 ····· 365

■ 이기헌 위원 ····· 386

■ 이연희 위원 ····· 398

■ 이주영 위원 ····· 437

곽규택 위원님(국민의힘)

서면질의서

1. 감사원장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감사원장의 역할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 그 원칙에 따라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성역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감사원의 공정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감사대상 선정, 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과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감사원의 공정”이라 생각합니다.

3. 후보자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제가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유를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 감사원장이 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가장 시급한 감사원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졌고, 그로 인해 감사원 내부의 사기 등이 떨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 감사원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 감사원장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십니까?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제 자신부터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저를 포함해 감사원 직원 모두 이를 관철시킬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감사원 내부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 과거 민변 활동 등을 이어오며 SNS 및 기고문, 강의 등을 통해 밝힌 정치적 견해 중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싶은 입장이 있으신지?

□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13대 민변 회장 취임 전 민변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했고, 활동 기간 동안 맡은 직책이나 역할을 어떻게 되시는지?

□ 199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민변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후 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위원장, 출판홍보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 민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민변 부회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9. 통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정신(헌법 제4조)에 따라 평화적 통일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탈원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 정치적 감사 의혹으로부터 감사원이 독립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정치의 감사화, 감사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 후보자께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와 지난 정권에 대한 감사 중,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후보자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오로지 국민을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이에 어떠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에 도움이 되는, 국민의 삶에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우선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3. 후보자께서는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나 가족의 큰 이익을 포기해야 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 30여 년간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을 중요한 소신으로 공익을 위해 힘을 보탰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나 가족의 큰 이익을 포기했던 사례는 특별히 없습니다.

14. 감사원장으로서 내린 결정이 훗날 역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면, 후보자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충분한 숙고를 거쳐 신중하게 의사결정하고, 불필요한 오해 역시 제기되지 않도록 감사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이러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한편,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 역시 감내할 것입니다.

15. 감사원장을 마친 뒤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아직 퇴임 이후의 일을 생각해 본 바는 없으나,

○ 지난 30년 이상을 변호사로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살려 공익적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6.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것이 감사원장의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혹은 국정 철학이 법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감시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나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느 누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도록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17.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후보자가 평가하는 가장 긍정적인 점과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8.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9.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장기적 국가 시스템 설계보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해 역사학계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국가원수의 발언이 정책 신뢰와 행정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대통령의 발언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헌 논란은 여전한 상황인데 해당 법안에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국회 입법활동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78년 만에 검찰이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검찰이 해체되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후보자께서는 과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정부 정책 또는 정부조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개헌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감사원 소속 등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나 각 대안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 향후 개헌이 논의되면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임기 등 개헌 사안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도록 개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개헌 사안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후보자께서는 전문성보다 인연·성향이 우선되는 인사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재명 정부 코드인사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감사원이 현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 국민과 공직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국민체감형 감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9.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방향을 직·간접적으로 요청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적 관심사나 정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더라도,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감사 방향을 판단·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장 직을 수행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 감사원장 임기 중 대통령과 정례적·비공식적 소통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원은 「헌법」 제99조 및 「감사원법」 제41조 등에 따라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중요 감사 결과 보고)하고 있습니다.

- 과거 감사원장 시기에도 「헌법」과 「감사원법」 등에 따라 대통령에게 결산검사보고, 필요시 중요 감사 결과 보고 등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31.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국정 실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은 감사원장 개인적인 입장이 아닌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감사결과를 통하여 국민들과 소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 낭비·절차 위법 소지가 있다면 감사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회계 및 직무와 관련되는 재정 낭비나 절차 위반 사항은 기본적으로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33. 감사 결과가 대통령 또는 여당에 불리하더라도 보고서 공개와 후속 조치 등을 취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감사원은 국가안보·군사기밀 등 정보공개법 등에 따른 비공개 감사결과를 제외한 모든 감사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 현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이 고위 공직 전반에 포진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감사 대상 기관에 민변 출신 인사가 장·차관 또는 기관장으로 재직 중일 경우, 감사 강도와 기준에 차이가 없음을 어떻게 입증할 계획이십니까?

□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그러한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 감사원 내부 인사에 있어 이념·성향·출신을 철저히 배제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독립적·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이념·성향·출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 그러한 부분을 배제한 객관적인 인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충분히 유념하여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 후보자께서는 과거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한 이력이 있습니까?

□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38. 과거 시민단체 활동 등이 감사 대상 기관의 공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과거 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 대상 기관의 공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 감사원이 ‘정권의 방패’ 또는 ‘정치 감사 기관’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 후보자께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제 자신부터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나, 선관위의 자체 감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 후보자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선관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에 따른 결산 및 회계검사의 대상으로 알고 있고.,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선관위의 결산 및 회계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게 감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 과거 민변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수 맡은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구체적 사건번호 포함)

□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이재명 정부는 文정부의 탈원전·탈핵 정책이 아닌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중인데, 탈원전·탈핵 주장을 강하게 펼쳐온 후보자의 입장과는 다른 듯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현시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그간의 활동은 대규모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전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입장으로 정부 정책의 입장과 크게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43. 민변 활동 과정에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는데, 현재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현재 논의 중인 사법개혁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 후보자께서는 누구로부터 지명되었다는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 발표 당일인 12. 7. 정오쯤에 인사수석으로부터 유선으로 내정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45.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갖게 된 계기 및 시간은 어떻게 되며, 교류가 있었던 대표적 사례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 같은 민변 회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친분은 없습니다.

46. 감사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외압에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감사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 후보자가 생각하는 감사원장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의 요건 3가지는 무엇입니까?

□ 위원님들께 검증을 받는 후보자의 지위에서 감사원장이 되지 말아야 할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8. 감사원 혹은 감사원장 본인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원과 감사원장 본인도 국가기관이자 공직자로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정기적으로 국정감사를 수감받고 있고 수시로 자료제출 및 현안 질의·답변 등을 통해 감시를 받고 있으며, 언론의 상시 감시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인 내부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여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9. 예산 집행 과정에서 법규 위반은 없었으나, 그 결과가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감사원은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원전 산업 활성화 등)

□ 감사원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므로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후보자께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가장 기억 남는 사건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여 어느 하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1997년 방송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방송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 변론에 참여하여 최초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고,

- 위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정책적·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2.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월북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보았고, 감사원에서도 이에 대해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 감사원장 후보자 신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한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전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으로 최종 판단을 하였고, 이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4.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어떠한 입장 갖고 계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 신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에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조심스러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익위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비판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TF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김인회 전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등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인권침해나 표적감사 등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감사 폐지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최근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을 개정하여

○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범위와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범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의 행정사무 대부분이 정책을 통해 수행되므로 이에 대한 감사는 불가피하지만,

- 정책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당·부당을 따지거나 관련된 책임 추궁이 과도할 경우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님(더불어민주당)

서면질의서

1. 재임기간, 후보자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감사원 운영 방향은?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제 자신부터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감사원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감사문화, 불합리한 제도 등)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5가지), 향후 추진 계획은?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감사원의 자정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 확대”,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내부감찰·인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 아울러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극행정·기관간 갈등 해결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면책·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 후보자가 생각하는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지?

□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나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 구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4. 향후 헌법 개정 시 감사원 지위, 기능 및 역할 등 개편을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감사원 소속 등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나 각 대안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의 행정감시 기능, 정치적 중립성과 우리 나라의 역사적 경험 및 국제적 추세 등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 향후 개헌이 논의되면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대통령이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제가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유를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 감사원장이 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 감사원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과 능력은 무엇이고, 후보자 스스로 판단할 때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외압에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이며, 이를 좌우명으로 삼은 이유는?

○ 그간 종교 생활을 해오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8. 감사원장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무엇인지?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외압에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인사·조직·예산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나, 제도적 보완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 현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 공정한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결과 검토 등을 위해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감사원은 이와 관련하여 감사계획 수립, 범죄혐의 사건 처리 등에 있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권한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감사원이 진행 중인 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후보자의 시민사회·인권 분야 경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감사 개혁을 추진하는 데 어떤 점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

□ 저는 30여 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환경·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소송을 수행했으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소신으로 공익을 위해 힘을 보탰던 경험이

-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을 운영하고 나아가 국민과 공익을 위한,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일각의 코드인사, 민주당 진영논리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민변 회장이나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것이 오히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변이나 국가경찰위원회 등은 그 활동목적이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에 있다고 생각하며, 해당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를 밑거름 삼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 감사위원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 감사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다만, 감사원장 후보자 신분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의 취지와 본질에 맞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질 수 있도록 적임자를 제청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이 수행한 주요 감사 전반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어떠한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에 대한 평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의 이른바 '정권 표적 감사' 또는 '정책 감사' 논란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은 대내외 비판과 문제제기를 고려하여 「감사원 운영쇄신 TF」를 구성하고 2025. 12. 3. 조사결과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치·표적 감사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6. 감사원의 월성 원전 관련 감사가 적법하고 정당한 감사였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그간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와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들었고, 특히 공직사회가 정책 추진 시 사후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 정책 판단 영역과 위법·부당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정책 판단 영역은 정책결정권자의 고유한 판단 사항으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 감사원이 그 당부를 따져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근 감사원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사익추구 등 불법·부패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그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과도한 정책감사로 인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판단 영역과 위법·부당 행위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 감사원이 정책 실패에 대해 향후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지?

□ 감사의 목적은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이며, 정책 실패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그 원인과 양태가 다를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감사원은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 결정 관련 사안은 불법·부패행위만 책임을 추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과도한 정책감사로 인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실패 책임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 감사 범위 설정 시 행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 행정부 고도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정책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판단, 선택에 있어 재량 영역 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감사를 신중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 감사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 감사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최근 감사원도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감사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책감사 논란 방지를 위한 법제화 추진 방안은?

□ 감사원은 '25. 12. 12.「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하여

○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범위와 그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범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이 없도록 감사원규칙 개정내용을 「감사원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 감사 보고서 작성 시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 감사보고서 작성 시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며,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보고서 작성 시 사실과 평가를 최대한 엄격하게 구분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 감사원의 감사 착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감사원의 감사 착수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은 「고위험 중점분야」 등을 토대로 사안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연간 감사계획 등에 따라 감사사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계획 수립 등에 있어 감사위원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 감사 범위 설정 시 행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 행정부 고도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정책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판단, 선택에 있어 재량 영역 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감사를 신중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감사 착수 과정에서 국회 또는 시민의 문제 제기를 어떻게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국회 또는 국민의 감사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은 국회감사요구, 국민·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국회와 국민의 감사요구를 감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체감형 감사를 활성화하고, 국회와 국민의 감사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6. 연간 감사계획 수립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국회와 협의해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울러 국회와 협의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은 매년 「고위험 중점분야」 등을 토대로 사안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간 감사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그간 감사원은 감사사항 발굴을 위해 국회 예·결산 시정요구사항, 국정감사 논의사항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 이번 감사계획 수립 시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국회가 민의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기관인 만큼, 감사활동에 있어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에 대해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7. 감사원 국회사무소가 설치되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국회에 대한 책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 후보자의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 국회가 민의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기관인 만큼, 감사활동에 있어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정 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에서는 직무상 독립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아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정책감사) 폐지가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면책선언과 같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는,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당·부당을 따지거나 과도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부패·비리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9. 후보자께서 판단하는 감사원 특별조사국 폐지 결정의 정당성 및 조직 내 예상되는 반발, 특별조사국 업무의 타부서 이관 로드맵(구체적 계획)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특별조사국 운영 과정에서 비판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TF를 통해 점검한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특별조사국 업무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편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 감사원 내부 인사 운영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무엇인지?

□ 인사운영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31. 일각에서 감사원의 1급 공무원 전원을 일시 면직한 사례에 대해 기관의 독립성 및 직업공무원 제도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원의 독립성 및 직업공무원 제도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 특정 인사나 특정 시기·부서에 국외 훈련 기회가 집중되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 후보자의 신분에서 국외훈련 선발 현황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외 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3. 2025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레고랜드 사태 관련 감사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취한 후속 조치의 내용과 그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34. 아울러 레고랜드 사태 감사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위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5.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하여 감사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언론인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의 사건 등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나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원이 해명할 사안이나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등에 대하여는 보도자료 등으로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6. 감사원장의 권한 행사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지?

□ 감사원장의 권한과 책임은 감사원이 헌법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 범위와 한계는 입법적 논의를 통해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감사원의 운영쇄신 TF의 활동결과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조심스러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이 그동안 제기된 여러 비판을 성찰하고 개선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제기한 감사원 운영쇄신TF 활동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나,

○ 감사원에서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근거하여 TF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9. 후보자는 감사원 운영쇄신TF를 통해 그간 감사원 개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조심스러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이 스스로 그동안의 제기된 여러 비판을 돌아보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40. 2025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감사원 고위 간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와 관련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유병호 감사위원이 최재해 전임 감사원장보다 약 2배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서도 영수증 등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해당 지적 이후 감사원이 취한 후속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41. 이와 같은 특수활동비 집행 방식이 감사원의 책무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42. 감사원은 2023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급 방식을 일괄 정액 지급에서 활동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한도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반기별로 감사정보 활동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도 제출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활동계획서 심사에서 거절된 사례가 거의 없고, 사후 활동보고서를 근거로 특수활동비를 회수한 사례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43. 감사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정작 자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서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44.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45.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사용 기준 ▲집행 한도 ▲사후 검증 ▲국회에 대한 보고 범위 등에 대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46. 아울러 후보자는 감사원장 본인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있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 국회·언론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구체적인 집행방식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고, 집행방식 개선 및 공개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47. 감사원 회계감사권 등 일부 기능의 국회 이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 회계감사권 등의 국회 이관 방안은 국회의 행정감시 기능 강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적 중립성 및 행정부의 감사 비협조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 개헌이 논의되면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의 복안은?

□ 후보자의 지위에서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등 관련 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더불어민주당)
서면질의서

1. 최근 감사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정치·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후보자는 감사원 개혁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 감사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제 자신부터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 감사원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과 감사원의 자정기능 강화를 통하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사실상 무력화한 사례들이 확인된 바, 감사위원회 통제 기능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 감사위원회의의 통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제도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 착수·기간·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된 사례가 반복되었음. 감사 착수 요건을 법·제도로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감사원은 그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특정 감사에 착수하여,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사항 선정 등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5.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정치·표적감사, 강압감사, 인사·감찰권 남용 등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음. 해당 TF 진단에 대한 후보자의 총평은 무엇인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나,

○ TF에서 점검결과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통제 강화, 특별조사국 개편 필요성 등 여러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감사원 운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 특별조사국 폐지 또는 대폭 개편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특별조사국 운영 과정에서 비판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TF를 통해 점검한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특별조사국 업무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편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 수사요청 남용과 언론 공개로 인한 인권 침해가 지적되었음. 수사요청 및 중간 발표 기준 강화 권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하여 중간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수사요청 사실에 대한 중간발표 등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8. TF는 포렌식 남용을 문제로 지적함. 디지털 포렌식 통제 기준을 원상회복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 있어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내용 등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 최근 국회·언론 등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근거, 과도한 활용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 과거 정권별로 반복된 정권 교체기 정치감사 논란에 대해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견해는 무엇인지?

□ 위원님께서 정치의 감사화, 감사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 감사는 있었으나 결과가 미진했던 이른바 '봐주기 감사'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이러한 감사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무엇인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한편,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감사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1. 특정 사안에서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TF를 통해 점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수사요청 사실에 대한 중간발표 등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12. 감사원 스스로의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 논란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국회·언론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구체적인 집행방식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고, 집행방식 개선 및 공개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국민의힘)

서면질의서

1.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 자신부터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전임 원장의 발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후보자의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향후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감사원의 헌법적 지위(대통령 소속, 직무상 독립)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 감사원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과 감사원의 자정기능 강화를 통하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민변 회장, 국가경찰위원장 등 특정 성향의 경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코드 인사'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민변 회장이나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것이 오히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변이나 국가경찰위원회는 그 활동목적이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에 있다고 생각하며, 해당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를 밑거름 삼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가경찰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견해

□ 감사원장은 헌법상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기관장으로서, 개인적 소신보다는 국민과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감사운영에 있어 항상 국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감사위원회의라는 합의제 기구를 통해 감사원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전 정부 대상 '표적 감사', '정치 감사' 논란을 근절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사항 선정 시 감사위원회의의 논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실질적 통제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대리했던 새만금 간척사업,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관련 소송 등은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다투는 사안이었는데, 향후 유사한 정책감사 수행 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나

○ 말씀하신 소송 등에 참여한 이후 여러 합의제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거나 활동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거나 논란이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 아울러,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의 제척사항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감사'가 포함되는데, 과거 소송 대리인으로서 활동했던 사안과 관련된 감사를 회피 또는 기피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의 제척사항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큰 사회적 쟁점이 된 바 있는데, 후보자가 과거 '탈원전'을 주장하며 수명연장 반대 소송을 이끈 점이 향후 에너지 정책 감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감사원장은 헌법상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기관장으로서, 국민과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감사운영에 있어 항상 국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에서 정부의 경제성 분석 오류와 환경 파괴를 지적하며 사업 취소를 주장했는데, 국책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감사를 수행할 때 후보자의 과거 활동이 편향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감사원장은 헌법상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기관장으로서, 국민과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감사운영에 있어 항상 국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민변 회장 재임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감사원장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민변은 그 활동목적이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에 있다고 생각하며, 해당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감찰을 수행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 국가보안법을 '헌법 위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했던 단체의 대표 경력이, 국가 법질서 수호를 직무로 하는 공안기관 감사 시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민변은 그 활동목적이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에 있다고 생각하며, 해당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 국가경찰위원장 시절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감사원은 정부 정책 및 입법 과정의 위법·부당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내란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위에서 사법제도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검사가 판사가 되는 격'이라 비판한 사례처럼, 감사 대상이었거나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사안에 대해 감사 책임자가 될 경우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나

○ 감사원장 또는 감사위원은 그 지위에서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등 독립적 헌법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법리적 견해

□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선관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에 따른 결산 및 회계검사의 대상으로 알고 있고,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선관위의 결산 및 회계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강압 감사' 사례가 지적되는 등 감사 방식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문화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 최근 감사원 감사를 둘러싸고 감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높은 수준의 자정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여 인권 친화적 기관으로 변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변호인 참여권 법제화, 디지털 포렌식 실시절차 강화 등 제도보완 노력에 더해,

- 수평적인 소통·협력이 활성화되도록 감사원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감찰 및 교육 등 감사문화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 감사원장 임명 시, 과거 변호사로서 수임했던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감사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충돌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나

○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의 제척사항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 특정 법률안 통과를 위한 '위장 탈당'이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위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법률안 발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위에서 특정 법률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 자신부터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 감사원장 퇴임 이후 대형 로펌 취업이나 변호사 개업이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국민들께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 감사원 감사에 정치권이 공수처 고발을 통해 견제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감사원장에 임명된 후 감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나 교감은 없었는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 또는 여권 핵심 인사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가?

□ 같은 민변 회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특별히 말씀드릴 친분은 없습니다.

○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과의 사전 조율은 없었습니다.

24. 향후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부당한 감사 요구(예: 전임 정부 인사 표적 감사)가 있을 시, 이를 거부하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감사운영에 국민·국회 등 외부의 감사수요를 적극 반영할 것이나

○ 해당 감사 요구가 정치적 논란이 있는 등 부당한 사안이라면 감사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감사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 사업이나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성역 없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가?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26. 월성 원전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다가,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 기관인 원안위 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변호사 윤리 및 공직자 이해충돌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원안위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소송대리인단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원안위 위원으로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안건을 회피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7. 원안위 위원 임명에 대해 원안위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2019. 7. 16.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참고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설명자료」(2019. 7. 16.)

[① 김호철 위원 관련]

○ 김호철 위원이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원자력 안전을 위한 열린토론회」의 기조발표를 요청받고,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은 사실이나,

○ 김호철 위원은 동 수당이 원자력연구원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대전광역시로부터 수당지급에 필요한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았음), 나중에 수당이 원자력연구원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원자력연구원에 동일 금액을 반납하였음.

○ 따라서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이용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원안위법」 제2조에 따른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어 **결격(제10조 제1항 제5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8. 감사원장 재직 중, 과거 민변이나 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활동했던 인사들이 연루된 사안에 대한 감사를 맡게 될 경우,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가? 회피 신청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나

○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의 제척사항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해 나가고,

-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감사 폐지'가 정부의 중대한 정책 실패나 수십조 원의 예산 낭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하는가? 이는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닌가?

□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는,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당·부당을 따지거나 과도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부패·비리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0. '정치·표적 감사'의 온상으로 지목된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특별조사국 운영 과정에서 비판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TF를 통해 점검한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특별조사국 업무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편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뒤집히는 '정치 감사' 논란을 근절할 구체적인 쇄신책을 가지고 있는가? 전임 정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쇄신 TF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후보자 지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조심스러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이 스스로 그동안의 제기된 여러 비판을 돌아보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에 대해서는 TF도 점검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 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대통령실의 의중과 다른 인사를 제청할 소신이 있는가?

□ 감사위원 임명제청권과 임명권은 충돌과 갈등관계가 아닌 협력과 조화의 관계라고 생각하며

○ 향후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의 취지와 본질에 맞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3. 후보자의 경력은 인권·환경 분야에 치우쳐 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감사해 본 경험이 전무한데,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를 지휘할 것인가?

□ 행정 경험 부족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를 공감하며, 앞으로 감사원 직원들과 소통·협력하고,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4. 감사원의 핵심 기능인 회계감사와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보라.

□ 후보자의 지위에서 감사원 세부업무를 알지 못하여 당장 로드맵을 제시할 수 없으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업무를 세밀하게 살펴 회계검사, 성과감사 기능 강화를 포함한 감사원 운영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국가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원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조직 개편 방안은 무엇인가?

□ 감사원은 미래 위험요인 대비에 대한 감사사항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감사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국가적 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인력·기능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36. 감사원 내부의 '정치 감사' 논란과 전·현직 수뇌부 간의 갈등으로 무너진 조직을 어떻게 통합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리더십 비전을 밝혀달라.

□ 우선 최근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들로 직원들 간에 분열과 갈등이 생긴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감찰 및 교육 등 내부 자정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나아가,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로 바꿔가기 위해서 우선 수평적인 소통과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37. 청문회 과정에 5대 인사배제 원칙 위반, 중대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 적발될 시 사퇴하실 용의가 있는지

□ 감사원장으로 내정되기 전에 ‘7대 인사검증 기준’ 이상으로 세세한 검증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38. 감사 개시 여부를 감사원장이 사실상 좌우하는 현행 구조에서, 감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 역시 정치적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후보자는 감사 미개시 결정의 사유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가?

□ 현재 대부분의 감사사항 선정은 감사위원회의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원장이 감사개시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일부 감사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착수되고 처리되어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향후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 “정치 감사 근절”이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 대한 감사 자제”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정당한 권력 감사’와 ‘정치 감사’의 구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한 권력 감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것이며

- ‘정치 감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결국 감사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40. 감사 결과 발표 시점이 선거·국회 일정과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을 키운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감사 결과 공표 시점에 대한 내부 기준을 제도화하거나 명문화할 의향이 있는가?

□ 아직 후보자 신분으로 감사 결과 공표 시점을 정하는 프로세스를 명확히 알지 못하나, 내부 공개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감사 착수 단계에서 이미 결론을 전제한 이른바 ‘결론 유도형 감사’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적 통제 장치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가?

□ 소위 ‘결론 유도형 감사’를 차단하는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사항 선정 및 결과 처리에 있어 감사위원회의의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2.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의 판단이 곧바로 징계·고발로 이어지는 구조는 감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반론권·기록 열람권·변호사 조력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의향은 있는가?

□ 감사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문답조사 시 변호인 입회나 감사소명자료 제출 등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감사원 감사를 둘러싸고 감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디지털 포렌식 남용 등으로 인해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높은 수준의 자정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여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변호인 참여권 법제화, 디지털 포렌식 실시절차 강화 등 제도보완 노력에 더해,

- 수평적인 소통·협력이 활성화되도록 감사원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감찰 및 교육 등 감사문화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 감사원장이 특정 사안에서 회피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이해충돌 심사 또는 자문기구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의 제척사항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 향후 이재명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재정·에너지·부동산·복지 분야 등)에 대해 ① 감사 착수 기준 ② 감사 범위 ③ 책임 추궁 기준을 전 정부 감사와 동일한 잣대로 적용할 것을 명확히 약속할 수 있는가?

□ 감사의 기준은 어느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45. 감사원이 정책 실패를 이유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 후보자는 정책 판단의 영역과 명백한 위법·부당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하라.

□ 정책 판단 영역은 정책결정권자의 고유한 판단 사항으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 감사원이 그 당부를 따져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근 감사원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사익추구 등 불법·부패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그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과도한 정책감사로 인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판단 영역과 위법·부당 행위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6. 선관위 등 헌법기관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의 권한 남용 논란이 재발할 경우, 감사원장으로서 공식 사과 또는 제도 개선을 포함한 책임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가?

□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원의 자정기능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47. 감사원 내부에서 정치적 성향이나 감사 방향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증언이 반복돼 왔다. 후보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인사 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나 공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8. 감사원장의 임기 중 발생한 중대한 정치 감사 논란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 원장직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밝혀 달라.

□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기관장인 본인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 취임 이후 정치적 논란이 컸던 감사 착수·종결 사례, 회피·기피 결정 현황, 감사 결과 변경·번복 사례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는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50. 오늘 청문회에서 한 답변과 상충되는 감사가 향후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절차적 통제 장치 마련에 동의하는가?

□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국회에서 제도적·절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신다면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1. 후보자는 2018년 민변 인터뷰에서 “환경문제는 운동이 우선이고 소송은 다음”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감사원장은 법과 증거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데, 후보자의 이러한 ‘운동 우선’ 사고방식이 향후 감사의 착수, 범위, 결론 형성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 통제 원칙은 무엇인가.

□ 감사원장은 헌법상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기관장으로서, 개인적 소신보다는 국민과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감사운영에 있어 항상 국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52. 후보자는 새만금·월성 등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운동과 소송을 결합한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이 되었을 경우, 시민단체나 이해관계 집단의 여론 형성 또는 감사 청구가 감사의 방향과 강도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

□ 감사원장은 헌법상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기관장으로서, 감사방향은 언제나 국민과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감사운영에 있어 항상 국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53.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탈핵·탈원전이 시대적 공감대이지 이념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감사원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 비용, 효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기관인데, 원전 정책 감사 시 가치 판단과 감사 판단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또한 원전 확대 정책과 축소 정책 어느 쪽이든 동일한 감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

□ 감사원장은 헌법상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기관장으로서, 감사방향은 언제나 국민과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감사운영에 있어 항상 국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54. 후보자는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감사원장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자력 규제기관을 감사할 경우, 과거의 비판적 입장과 무관하게 감사 범위와 결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피, 자문, 검증 장치는 무엇인가

□ 감사원은 감사원장으로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감사위원회의라는 합의제 기구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방향은 언제나 국민과 공익을 우선할 것이고,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또한,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의 제척사항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 후보자는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수 수행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장으로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안기관을 감사할 때 법집행의 적정성 감사와 제도·정책에 대한 개인적 비판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또한 과거 활동으로 인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답하라.

□ 감사원장은 헌법상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기관장으로서, 감사방향은 언제나 국민과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감사운영에 있어 항상 국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 감사위원회의라는 합의제 기구를 통해 감사원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 또한,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의 제척사항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감사원장으로서 국방부, 병무청, 군사법원 등 관련 기관을 감사할 때, 후보자의 인권관이 감사 판단의 선결론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감사원장은 헌법상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기관장으로서, 감사방향은 언제나 국민과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감사운영에 있어 항상 국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 참고로, 감사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기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로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있어 선결론이 작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57. 후보자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언급하며 시기별 군 사망자 수 감소 추이를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수치의 공식적인 출처는 무엇이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될 경우 이를 정정할 의향이 있는가?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자료로 생각되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발언 시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후보자는 민변을 “삶의 등불”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정체성을 드러냈다. 감사원장 임명 이후에도 특정 단체의 가치나 정체성이 감사원 인사나 감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변 관련 인사와의 관계에서 적용할 제척·회피 기준은 무엇인가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특정 단체의 가치나 정체성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업무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업무 추진 과정에서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감사원법」에 따라 회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 후보자는 유쾌하고 격 없는 소통을 강조해 왔다. 반면 감사원은 엄정성과 기밀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후보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감사원의 기강, 보안, 절차 준수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작성, 결재, 대외 발표 과정에서 어떤 통제 원칙을 둘 것인가.

□ 직원들과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강조해왔고, 그러면서도 업무적으로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임해 왔습니다.

○ 감사원장으로도 임명되더라도 위 두 가지 방식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 감사업무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중간결과 발표 등에 있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60. 후보자는 민변 내부의 정서 격차와 비활동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감사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감사 착수와 결론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어떻게 기록하고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혀 달라.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장으로도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감사원 내부의 소수의견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61. 후보자는 환경운동연합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환경운동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 재직 중 과거 함께 활동했던 단체가 연루된 사안에 대해 외부 독립 검증이나 이해충돌 심사를 의무화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나

○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의 제척사항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해 나가고,

-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 후보자는 운동을 우선하고 법적 판단은 보충적이라는 관점을 밝혀 왔다. 감사원 감사에서 정책의 바람직함 평가와 법령, 예산, 절차상의 위법 또는 부당 판단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라.

□ 감사원장은 헌법상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기관장으로서, 개인적 소신보다는 국민과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감사운영에 있어 항상 국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63. 감사원 내부에서는 강압 감사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강압 감사의 정의는 무엇이며, 자료 요구, 조사 및 면담, 처분 요구와 고발 단계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는 무엇인가.

□ 최근 언론과 「감사원 운영쇄신 TF」 결과 등을 통하여 강압감사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강압감사는 상대방의 진술을 강요하는 등 피감기관의 의사와 정당한 요청에 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높은 수준의 자정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부동제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여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변호인 참여권 법제화, 디지털 포렌식 실시절차 강화 등 제도보완 노력에 더해,

- 수평적인 소통·협력이 활성화되도록 감사원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감찰 및 교육 등 감사문화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마를 의무감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장 역시 정권이 아닌 헌법기관에 대한 책임이 핵심인데, 대통령실이나 여야 정치권과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실천 규범과 공개 원칙을 둘 것인가.

□ 감사기준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65. 후보자는 민변 활동 과정에서 회원 간 상호 도움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감사원장은 퇴임 후 전관예우 논란이 특히 큰 자리인 만큼, 재직 중 및 퇴임 후 로펌, 기관, 기업과의 접촉제한과 취업 또는 사건 수임 제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원칙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감사원법」에 따라 회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 퇴임 후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6. 후보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와 해당 소송과 원안위원 직무 간의 직접적 관련성은?

□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관계가 달라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와 관련된 사건을 대리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는 본인의 원안위 위원 임명이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 2018년 원안위 위원 임명 당시 「원안위법」(제10조)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 참고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82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68. 당시 정치권에서 후보자의 원안위 위원 임명이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와 본인의 책임 인식에 대해 명확히 밝혀 달라.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 있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9. 원자력 규제기관 위원이면서 동시에 탈원전 진영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였다는 점에 대해, 후보자는 이를 이해충돌로 인식하지 않았는지,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왜 즉시 직무 회피 또는 사퇴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소송대리인단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원안위 위원으로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안건에 대해 회피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70. 원안위 위원 재직 당시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심의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반복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장기간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후보자가 해당 심의 지연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 원전의 안전보장이라는 맡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원안위 위원으로서 정당한 심의 및 논의과정이었으며, 원안위 위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71. 신한울 1호기 심의 과정에서 후보자가 비행기 충돌 가능성이나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가능성 등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주장이 있다.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와 그러한 가정이 원자력 안전 규제의 과학적·기술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 원안위 위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심의에 임했습니다.

○ 다만 항공기 충돌 가능성과 관련하여, 원전을 설계할 때 미국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충돌 등 중대사고 시 국민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전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72.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등 이미 검증된 기자재에 대해 추가 실험이나 재검증을 요구하며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요구가 법령이나 기술 기준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후보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 당시 PAR 입구에서만 수소농도를 측정하는 방식 등이 문제가 있다는 공익제보가 있어 원안위에서 논의된 바 있고,

○ 이후 진행된 논의 결과에 따라 본인의 임기가 종료된 후 전체 원전의 PAR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 신한울 1호기가 완공 이후 약 15개월 이상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막대한 전력 손실 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지연에 대해 원안위 위원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안위의 정상적인 심의 및 논의과정에 대해 이를 심의지연으로 평가하는 데 동의하기 어려우며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74.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영구 정지 승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황임에도 원안위가 이를 최종 승인했다는 비판이 있다. 당시 원안위 위원으로서 후보자가 어떤 검토를 했는지,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정부 정책 기조에 동조했다는 이른바 '거수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75. 후보자의 원안위 위원 시절 행적에 대해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과거 원자력 규제기관에서의 논란이 향후 감사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답하라.

□ 말씀하신 평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 다만,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식견과 법률지식 등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아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해 나가고

-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과정에서 후보자는 항공기 충돌보다 미사일 공격이 설계에 고려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속기록에 남아 있다. 원전 설계에서 테러·사보타주·군사 공격은 설계기준에서 배제하고 물리적 방호 규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제 기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보자가 이러한 기술 기준과 다른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77.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과정에서 미사일 공격은 별도의 물리적 방호 승인 절차에 따라 관리되며, 본 심의는 운영허가 기술기준에 대한 심사임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후보자가 해당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것은 전문기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78. 신한울 1호기 POSRV 및 PAR 관련 심의 과정에서 후보자는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았고, 보고기관은 이미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했다고 수차례 설명한 것으로 속기록에 기록돼 있다. 후보자가 동일한 질문을 반복한 이유는 무엇이며, 보고자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79. 후보자는 PAR 기자재 관련 보고 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기자재에 대해서도 성능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추가 실험이나 재검증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요구가 당시 적용되던 법령, 기술 기준 또는 국제 규제 기준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 당시 PAR 입구에서만 수소농도를 측정하는 방식 등이 문제가 있다는 공익제보가 있어 원안위에서 논의된 바 있고,

○ 이후 진행된 논의 결과에 따라 본인의 임기가 종료된 후 전체 원전의 PAR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도중, 보고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KBS 보도 내용이나 PAR 논란을 이유로 운영허가 심의 절차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후보자는 해당 발언이 운영허가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81. 원안위 회의 속기록에는 후보자가 보고기관 관계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질문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개석상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발언과 태도가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 위원으로서 요구되는 품위와 중립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82. 후보자는 KBS 보도 관련 PAR 연구경과 보고 과정에서 보고기관과 원자력 산업계를 향해 “말 바꾸기와 거짓말”, “참 한심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평가였는지, 아니면 개인적 감정에 따른 발언이었는지?

83. 원안위 회의에서 후보자가 한수원의 조직 문화와 산업계 전반을 일반화하여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규제기관 위원으로서 개별 사안이 아닌 산업 전반에 대한 가치 판단적 발언을 공개회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84.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가 장기간 반복·지연되면서, 완공 이후에도 상당 기간 상업운전을 하지 못해 막대한 전력 손실 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후보자는 이러한 심의 지연에 대해 원안위 위원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85.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적·기술적 판단을 기반으로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후보자의 원안위 위원 시절 발언과 태도가 과학적 검증보다는 개인적 의문 제기와 가치 판단에 치우쳤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안위의 정상적인 심의 및 논의과정에 대해 이를 심의지연으로 평가하는 데 동의하기 어려우며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86. 후보자는 원안위 위원 시절 원전 운영허가 심의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고 반복적인 문제 제기와 감정적 발언으로 회의 진행을 저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감사원장으로서 감사대상 기관과의 관계 설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지?

87. 감사원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존중과 절차적 공정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후보자는 원안위 위원 시절 회의 태도와 발언이 감사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절제된 권한 행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88. 후보자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문제 제기가 국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심의 절차와 제도 신뢰를 훼손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89. 원안위 위원 시절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향후 감사원장으로서 에너지 정책 및 원자력 관련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원전 규제 과정에서의 논란이 동일 분야 감사에서 이해충돌이나 편향성 논란으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나

○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의 제척사항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해 나가고,

-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 후보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시절 발언과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거나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의향이 있는지?

□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9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공정성·신뢰성을 핵심 가치로 명시하고 있다. 후보자는 원안위 위원 재직 당시 본인의 발언과 회의 태도가 이 다섯 가지 핵심가치에 부합했다고 생각하는지?

92. PAR 관련 심의 과정에서 후보자는 사업자 측 설명에 대해 “거짓말”, “선택적 발표” 등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규제 대상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발언이 규제기관 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93. 원자력 안전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사업 활동의 자유를 공익 목적상 제한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제는 최소침해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후보자는 원안위 위원 시절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94. 후보자는 원자력 안전 규제 분야에서 50년 이상 축적된 제도와 운영 경험이 존재함에도, 기존 규제 체계 전반을 불신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규제 시스템과 전문가 집단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95. 원안위 회의 속기록에는 후보자가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기술적·공학적 사안에 대해서도 강한 단정적 판단을 내리는 듯한 발언이 다수 기록돼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으로서 본인의 전문 영역과 타 전문가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원안위 위원 중 한명으로서 심의과정에서 다른 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도 존중하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96. 정무직 또는 위촉직 위원은 행정 책임과 감사 가능성에 대해 상시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후보자는 원안위 위원 재직 당시 본인의 발언과 결정이 사후 감사나 법적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97.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규제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효율성’을 명시하며, 이는 안전성 확보 이후 지체 없는 인허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보자는 원안위 위원 시절 규제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98. PAR 논란을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와 연계해 심의 중단 또는 지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한 검증을 넘어 사업 전반을 압박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있다. 후보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규제기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99. 규제기관 위원의 공개회의 발언은 해당 산업과 종사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보자는 원안위 회의에서의 본인 발언이 원자력 산업계 전반의 신뢰와 사기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본 적이 있는지?

100.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춘 기관이라는 인상을 주었다는 비판이 있다. 후보자는 원안위가 특정 정책 방향의 이행 수단처럼 비춰진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101. 규제기관 위원이 개인적 가치관이나 정책적 선호를 강하게 표출할 경우, 규제 판단이 정치적 결정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 후보자는 본인의 가치관과 규제 판단을 명확히 분리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02. 원안위 위원 시절 후보자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원자력 학계 일부에서는 “규제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점을 반성하고 개선하겠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원전 안전제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03. 감사원은 규제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절제, 객관성, 언어 사용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후보자는 원안위 위원 시절과 같은 발언 방식이나 태도가 감사원장으로서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가

□ 원안위 회의 석상의 발언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맥락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04. 후보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시절 본인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원자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는지, 아니면 규제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켰는지 스스로 평가해 주십시오.

□ 원안위 위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심의에 임했고,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과거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원안위 위원 시절의 PAR 및 신한울 운영허가 논란 전반에 대해,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국민 앞에 설명하거나 유감을 표명할 의향이 있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심의에 임했고,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과거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민변은 특정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집단적 입장을 표명해 온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이력이 헌법상 중립기관 수장 또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 민변 회장을 역임한 것이 오히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변은 그 활동목적이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에 있다고 생각하며, 해당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를 밑거름 삼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7. 후보자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후보자와의 어떤 인연으로 참석한 것인지?

□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108. 보수성향 후보 혹은 보수정당의 후보로 출마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말씀하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109. 민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20년 3월 SNS에 2014년 10월에 작성된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논평을 공유한 이유와 논평에서 민변은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라는 뜻을 밝혔는데, 12.29 여객기 참사 유족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에 부임하면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 유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10. 지난 정부에서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했음.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감사원장이 탄핵 대상으로까지 몰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치권의 압박이나 개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국회, 헌법재판소 등 각 기관의 고유 권한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사한 것으로서, 각 기관의 결정을 모두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향후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감사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 후보자는 2017년부터 전세계약금 5억 원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현 시세와는 큰 차이가 발생함.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사유와 임대인과의 특수관계인지 여부

□ 해당 아파트는 장모 소유로 장인 간병을 위해 2017년 입주하였는데

○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8년간 장인 간병을 계속하였다는 점과 기존 거주 아파트를 처분하고 입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모가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2. 후보자께서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2024년식 BMW X3(1,998cc) 차량과 관련하여, 차량의 구입 일자, 구입 가격, 신차·중고 여부, 판매자(딜러·법인·개인)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차량의 구입 자금 조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예금 인출, 금융기관 할부 또는 리스, 제3자 차용이나 지원 여부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구입 전·후 3개월) 및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차량의 실제 사용 주체는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가족 또는 제3자와의 공동 사용 여부가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비용 부담 구조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간 해당 차량과 관련한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 및 보험료 납부 내역, 자동차세 납부 내역, 정비·수리·유류비 등 주요 유지·관리 비용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의 과거 및 현재 직무 수행 또는 외부 법률자문·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제3자·기관·기업으로부터 차량 제공이나 비용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차량은 2014. 8. 29. 6,200만 원에 본인 명의로 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 구입 자금은 보유한 예금과 할부(32,145천 원)를 통해 조달하였고, 할부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는 임명동의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해당 차량은 가족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구매하였고, 공동 사용과 관련하여 비용을 별도로 분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해당 차량과 관련한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 및 보험료 납부 내역, 자동차세 납부 내역은 임명동의안에 첨부되어 있으며, 정비·수리·유류비 등의 비용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해당 차량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없고, 차량 제공이나 비용 지원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113.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사인 간 채권 30,000천 원과 관련하여 해당 채권의 발생 일자, 발생 사유, 채무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인 간 채권과 관련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채권 설정 시 후보자의 자금이 채무자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현금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자금 출처 및 인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채권의 이자율, 상환 기한, 상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이자 수령 또는 원금·이자 상환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관련된 자가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 정부 또는 공공기관, 공공사업·인허가·소송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해당 채권이 후보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 4. 13. 법무법인 한결(現 클라스한결)에 입사하게 된 동료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법인 출자금 납부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며, 관련한 차용확인서는 임명동의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료 변호사로부터 채권 발생일부터 매월 이자(123,000원, 이자율 4.92%)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환된 원금 및 미지급 이자는 없습니다.

○ 한편, 해당 채권의 채무자는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동료 변호사이므로 향후 감사원장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14.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방조제 착공 이후 30년이 넘었는데도 매립이 40%에 그쳤고,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를 전제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이러한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대해, 장기 국책사업의 성과 대비 재정 투입 구조를 어떻게 점검·평가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대통령은 또한 “도민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반복 제시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서 새만금과 같은 장기 국책사업에서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의 정직성이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만금 사업은 그간 여러 차례 사업 방향과 내용이 변경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앞으로 20~30년을 또 이렇게 애매하게 갈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감사원이 이러한 반복적 정책 변경 과정에서 사전 검토의 충실성과 의사결정 책임성을 충분히 점검해 왔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계산이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서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제성·실효성 검토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 전반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성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속 여부 자체를 감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여러 국가·공공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속에서 사업이 장기화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서 이러한 다수 주체 관여 사업에서 책임 주체가 분산되는 문제를 어떻게 감사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대통령의 발언은 새만금 사업을 특정 시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감사원이 장기간 지속된 국책사업에 대해 일정 시점마다 계속 추진, 조정 또는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성과 감사 또는 정책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대통령이 지적한 “계산이 되지 않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구조”는 이른바 매몰비용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서 이미 투입된 예산 규모와 무관하게, 향후 효율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감사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정치적 평가라기보다, 장기 국책사업 관리 방식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후보자는 감사원이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회계 감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새만금 개발의 문제의식을 계기로, 장기간 지속되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특정 국책사업에 대해 성과 중심의 정책 감사 또는 종합 점검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위에 있어 관련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나, 대형 국책사업의 성과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감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115. 후보자는 1964년 출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주민등록 초본에는 1977년부터의 주소 이력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1977년 이전의 주민등록 이력이 초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후보자가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77년 이전 후보자의 주민등록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대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당시 거주 지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제도 및 전산화 과정에서 과거 이력이 정리·누락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보자의 경우에도 행정적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77년 이전 기간 동안 후보자가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주민등록 이력의 공백 구간이 존재할 경우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후보자의 원칙적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이력 중 1977년 이전 공백 구간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이나 상세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1977년 이전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며, 1977년 이전 기간에 해외에 체류한 사실은 없습니다.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77년 이전 내역과 관련하여 설명을 요구하신다면 기억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6. 배우자가 회화 한점을 소유하고 있는바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직거래·화랑·경매·지인 증여 등), 어떤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한 올해 2월 경매에서 유찰된 것으로 나오는데, 판매 목적, 경매 당시 감정가(추정가), 시작가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나 대략 25년 전쯤(2000년경)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후 거주지에 계속 보관하다가 집 정리를 위해 2022년경 경매 위탁(옥션)을 의뢰하였으나 계속 유찰(3차례)되어 현재까지 보관 중인 상황입니다.

○ 2022년 최초 경매 당시 시작가는 4,000만 원이었고, 2025년 마지막 경매 당시 시작가는 2,500만 원이었으며, 경매 위탁과 관련한 확인 서류는 임명동의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님(더불어민주당)

서면질의서

1. 현재 감사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후보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감사 보안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계획입니까?

□ 그간 감사원은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 최근 감사원 소관 국회 상임위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보고할 수 있도록 감사원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제약하는 측면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소속인 현재의 지위가 감사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거나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논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감사원 소속 등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나 각 대안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 향후 개헌이 논의되면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관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강화 방안이나, 피감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 감사원은 내부 감찰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2010년 7월부터 외부출신 감찰관의 지휘하에 내부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용된다면, 내부 감찰기구의 조직개편 필요성 등 내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강화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피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직원 대상으로 감사문화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실지감사 활동 점검 등을 통해 피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용된다면, 피감기관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지난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 또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이 감사원의 신뢰도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그간 표적·정치감사 논란, 과도한 정책감사 등으로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가 착수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면 어떤 개선이 필요합니까?

□ 그간 감사원이 실시한 일부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최근 감사원에서도 연간감사계획에 대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연중 추가로 착수하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개시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에서 정한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중심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감사원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전임 원장 재임 시절 논란이 되었던 '수시 감사' 비중 확대나 위원회 의결 전 보도자료 배포 관행 등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에 대한 평가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계획 수립, 보도자료 배포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감사위원회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강을 통해 감사원의 중립성·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복지부동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은 무엇입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최근 공무원이 각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추진 시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신기술·신산업 등 불확실성이 높은 고난도 업무에 대한 면책요건을 과감히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8.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의 독립성을 핑계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의 감시 기능을 존중하고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제출 가능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최근 감사원 소관 국회 상임위 의결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보고할 수 있도록 감사원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감사원은 타 기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곳임에도 정작 자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에는 소극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활비 집행 사유가 담긴 '집행계획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증빙을 강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구체적인 집행방식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고, 집행방식 개선 및 공개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10. 감사원이 자체적인 징계나 시정 조치로 끝낼 수 있는 사안까지 무리하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사실상 검찰 수사의 길을 터주는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개별 수사 의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 감사원도 이러한 차원에서 사익추구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고발·수사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감사원의 운영 방향을 잘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관저 공사 의혹과 관련된 지난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습니다.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재감사나 보완 감사를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감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검찰, 국정원 등 소위 힘 있는 권력 기관에 대한 감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거나 면죄부 주기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한 감사를 수행할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 2018년 이후로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권력기관들에 대해 정례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감사원에서 나름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국민들 기대에서 미치지 못하는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간의 감사결과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감사원 퇴직자들이 피감기관의 감사나 사외이사로 재취업하여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소위 감피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취업 제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유념하여,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로, 퇴직자 재취업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등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감사원 퇴직자가 감사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재취업 기관의 청렴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4. 정책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적으로 위법성을 따지는 감사는 공직 사회의 소극 행정을 유발합니다. 정책 판단의 영역과 위법 부당한 행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감사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시겠습니까?

□ 정책 판단 영역은 정책결정권자의 고유한 판단 사항으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 감사원이 그 당부를 따져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근 감사원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사익추구 등 불법·부패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그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과도한 정책감사로 인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판단 영역과 위법·부당 행위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 과학기술 R&D 분야 감사 시 연구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어 연구 현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감사 기준이나 전문 감사 인력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 과학기술 R&D 분야 등 실패가 용인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있어 별도의 감사기준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신기술·신산업 등 불확실성이 높은 고난도 업무에 대한 면책요건을 과감히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6. 국민이 공공기관의 부패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가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너무 쉽게 기각되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처리 기한을 엄수할 대책이 있습니까?

□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러한 감사청구제도의 취지에 유념하여 국민의 참여권 보장과 신속한 처리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17. 공공기관 감사 시 지나치게 재무적 효율성만 강조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 합리화를 유도할 감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시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 감사가 필요합니다. 인력 투입 위주의 저인망식 감사에서 벗어나, I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지능적인 감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 IT 기술을 활용하여 감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은 전산자료 연계·분석을 통한 '효율적 감사운영' 및 '수감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자료분석시스템(BARON)을 구축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IT 기반 감사인프라를 보다 강화하고, 감사운영을 개선하는 등 감사 체계를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 감사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여 피감기관을 압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 기간 연장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무리한 연장을 통제할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 감사기간이 무리하게 연장될 경우 피감기관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감사연장 현황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감사기간의 무리한 연장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 공직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 민간인에 대해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민간인 정보수집·사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국민의힘)

서면질의서

1. 감사원장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떠한 외압에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감사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감사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 간첩죄 확대 반대 등 특정 정치적 입장이 명확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 민변 회장을 역임한 것이 오히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변은 그 활동목적이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에 있다고 생각하며, 해당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를 밑거름 삼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후보자가 자랑할 만한 민변에서의 주요 활동과 성과는?

□ 민변에서 환경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환경 관련 공익활동을 펼쳐 환경권 분야가 민변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5.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간첩사건 소송 변론을 맡은 경험이 있는지? 주요 활동과 성과는?

□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후보자는 간첩죄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형법」상 간첩죄에 대한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위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인 이유는?

□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환경운동 및 소송 변론을 맡은 경험이 있는지? 주요 활동과 성과는?

□ 2001년경 새만금개발사업 집행정지 등 소송의 원고 대리인, 2015년경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의 대리인을 맡는 등 환경운동과 연관된 공익소송을 다수 맡았습니다.

○ 월성 1호기 소송에서 수명 연장과 관련된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원전안전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 공해추방운동연합 및 환경운동연합에서의 주요 활동과 성과는?

□ 공해추방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입니다.

○ 환경 관련 공해피해 법률상담을 주도하며 여러 변호사들이 환경운동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1994년 이후 영광 5호기 부지승인 취소소송과 핵폐기장 허위광고 관련 소송, 월성 중수 누출사고 현장조사 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시각에서 원전안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0. 후보자는 환경운동가로서 4대강 사업 반대를 주장한 바 있는지?

11. 후보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인지? 구체적인 이유는?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몸담았던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후보자는 환경운동가로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운동을 비롯해 탈원전 정책을 주장한 바 있는지?
13.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14. 후보자는 탈원전을 넘어 탈핵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 현재도 탈핵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인지?

□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후보자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대리인단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는지? (연월일)

□ 정확한 일자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략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활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6. 2018년 2월 환경운동연합을 그만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유는?

□ 환경 관련 변호사로서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최우선 가치인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직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17. 후보자는 원자력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그간 환경 분야에서의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익소송 등에 참여하였고,

○ 2018년부터 약 6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재직한 경험이 있어 부족하지만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활동 당시, 2021년 7월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1호기 사용 허가 결정 심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 원안위 위원으로서 신한울원전 1호기 운영허가와 관련하여 상정된 안건만으로는 원전의 안전성이 의심할 여지없이 담보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 당시 ‘한수원이 제출한 서류 가운데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발견됐다’라고 발언했는데,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상 항공기 충돌에 대한 항공기 재해도 분석 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안전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항공기 충돌의 설계 반영 기준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기재를 했다’라고 발언했는데,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있는지?

□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과거 수임했던 사건이 다수인 관계로 정확한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 과거 수임했던 사건이 다수인 관계로 정확한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종전 이력 및 사건과 관련하여 제척·기피·회피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재직 중 모든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 2019. 9. 27. 실시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안건에 대해 회피한 바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5. 현재 재직 중인 로펌에서 수행한 외부 법률자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역?

□ 2025. 12. 7.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다음 날인 12. 8.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사임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재직 당시에는 다양한 사건의 법률자문 등을 수행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문내용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6. 활동 중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수는 몇 명인지?

□ 민변의 회원 수는 약 1,200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민변에 확인하여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감사원 정상화 TF 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조심스러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이 그동안 제기된 여러 비판을 성찰하고 개선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 정책감사 폐지에 대한 견해는?

□ 최근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을 개정하여

○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범위와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범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의 행정사무 대부분이 정책을 통해 수행되므로 이에 대한 감사는 불가피하지만,

- 정책결정에 대한 사후적으로 당·부당을 따지거나 관련된 책임 추궁이 과도할 경우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9. 감사원은 불법·부패 행위가 발견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 관련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불법·부패 행위의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는 불법·부패행위는 단순한 규정·절차 위반을 넘어 금품수수·횡령, 특혜제공 등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고의성 있는 행위로서, 감사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 판단은 각 사안에 따라 원인 및 양태 등이 제각각이어서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9. 지난 감사원에서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등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장이 되면 재감사를 지시할 계획이 있는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말씀하신 감사들은 모두 감사위원회의에서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감사결과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현재 감사위원회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있다면?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위원회의를 합의제 기구의 취지에 맞게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감사위원회의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 최근 5년간(2021~2025) 감사원 특활비, 특경비 예산은? 관련하여 내년도(2026년) 예산 편성액은?

□ 최근 5년과 내년도 감사원 특활비, 특경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특수활동비	1,777	1,604	1,519	1,519	759	1,519
특정업무경비	4,658	4,537	4,657	4,418	4,556	4,340

32. 최근 5년간(2021~2025) 연도별 월별 감사원 감사정보 수집현황 건수는?

□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사정보 수집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감사정보 건수	4,255	3,702	3,685	3,729	집계 중

33. 최근 5년간(2021~2025) 연도별 월별 국회의 감사요구 건수는? 이 중 처리건수는?

□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감사요구 건수 및 처리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접수건수	4	1	7	21	30
처리건수	4	1	7	19	10

34. 과거 언론사 창간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참여 연도, 언론사명, 후원금 기탁금액은?

□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 사인 간의 채권 3천만 원은 무엇인지? 사인과의 관계는?

□ 2015년 4월경 법무법인 한결(現 클라스한결)에 입사하게 된 동료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법인 출자금 납부 명목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36.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 2017년 서초동아파트 전세계약 이후 현재까지 2년마다 갱신계약 중인데, 임대인에게 2년마다 임대차 연장 의사를 밝힌 것인지? 또는 임대인의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거주 중인지?

□ 현재 거주 중인 서초한빛삼성아파트의 임대인은 후보자의 장모이며,

○ 당초 장인 간병 목적으로 2017년 입주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38. 배우자와 장남, 차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한 일자와 증여금액은?

□ 2020년경 자녀들이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이라 기초자금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각 3,000만 원씩 증여하였습니다.

○ 증여 내용은 2020. 12. 15. 세무서에 신고하여 결정세액 0원으로 통지받은 바 있습니다.

39. 후보자 본인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급여액의 평균은 연간 약 2억 3,500만 원(상여 포함)입니다.

40. 후보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배당소득 금액 및 출처는?

□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배당소득은 연간 약 8,700만 원으로

○ 법무법인에서 받은 배당금(구성원 변호사)과 보유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41. 후보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자소득 금액 및 출처는?

□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이자소득은 연간 약 870만 원으로, 보유한 예금 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42.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각종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등을 납부한 내역이 있는지?

□ 후보자 본인이 과태료 등을 납부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납부일자	납부금액	위반사항
2007년식 렉서스 ES350 (배우자 명의)	2025. 8. 12.	70,000원	속도/신호
	2025. 4. 30.	70,000원	속도/신호
	2024. 10. 4.	70,000원	속도/신호
	2023. 10. 26.	24,000원	안전띠 미착용

43. 후보자를 포함한 이재명정부 고위직 11명이 모두 민변 출신인데, 특정 단체 출신이 정부인사로 다수 진출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답변이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후보자는 지난 2025년 3월, 민변 회원과 함께 ‘윤석열 파면 선고 촉구’ 거리행진에 참여했는데, 참여한 이유는?

□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직업인(변호사)으로서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헌정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변 회원과 함께 거리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45. 그 밖에 정치적 집회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지?

□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된다면,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지?

□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

○ 외부의 압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47.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사건에서 본인이 참여했거나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제척·기피·회피할 의사가 있는지?

□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의 제척사항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 후보자는 과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시,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비판했음.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당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전원의 명의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행정의 원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49.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로 1급 공무원에 대한 사표 강요가 있었는데,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인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감사원 내부에서도 1급 공무원에 대한 사표 강요가 있었는데,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된다면 내부 감사에 즉각 착수할 것인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51.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보는가?

52. 특별감찰관 임명이 9년간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53. 특별감찰관 국회 후보 추천 관련 야당 몫은 추천하였는데 여당 몫에 대한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여당이 추천하지 않아서

□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위에서 대통령실의 공무원 임명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후보자가 민변 활동하는 기간, 권력 기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많았음. 대한민국 권력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55. 권력기관 별 개혁 필요성?

□ 통상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사·조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권력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은 2018년 이후로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권력기관들에 대해 정례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나름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국민들 기대에서 미치지 못하는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간의 감사결과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위에서 권력기관 별 개혁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대통령제 개혁 필요성은?

57. 대통령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개헌을 통해 그 방법이 정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8. 국회 개혁 필요성은?

59. 국회 개혁의 주요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국회 운영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그 방법이 정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0.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을 78년만에 폐지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였음 적절한 조치로 보는가?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정부 정책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 이재명 정부는 특별재판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의 하는가?

62.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관련 위헌소지를 지적하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사법제도 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3. 이재명 정부들어 감사원 특별감사국을 폐지하였음. 모든 특별조사·감사는 부적절한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특별조사국에서는 사익추구, 특혜제공 등 공직사회의 부정·비리에 특화된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특별조사국 업무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편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4. 국세청은 최근 쿠팡 등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기업에 대한 권력기관의 특별조사는 필요한가?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다른 기관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님(국민의힘)

서면질의서

1. 감사원장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떠한 외압에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감사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감사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김인회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운영 쇄신 TF의 조사 결과 종합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 대상 감사를 ‘정치 감사’로 규정하고, “무리한 감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입장에 대한 동의 여부와 이유는?

□ 김인회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TF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책임감 있는 자세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번 일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며 감사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감사’가 정치적 보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 정치적 보복이라고 보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지와 답변에 따른 이유

□ 과거 감사원에서 말씀하신 논란이 있었던 점을 알고 있습니다.

○ 향후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감사사항 선정 및 처리 등에 있어 감사위원회의의 논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감사원 내부 갈등 봉합방안과 조직위상 제고 방안은?

□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졌고, 그로 인해 감사원 내부의 사기 등이 떨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등을 통해 감사원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 감사원 회계 감사권 국회 이관 논의에 대한 입장은?

□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 방안은 국회의 행정감시 기능 강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 및 행정부의 감사 비협조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 소속과 관련하여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실효적인 행정감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전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다수 집중되어 있다”는 ‘편중 인사’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8. 본인을 포함해 “현 정부 요직에 민변 출신이 다수 집중되어 있다”는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9. 지난 정부의 검찰 출신 편중 인사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듯이, 이번 ‘민변출신 인사 집중’이 감사원의 국민적 신뢰회복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내로남불이었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전·현 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답변이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과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을 직접 이끌었던 '탈원전 활동가'로서의 선명한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개인적 신념이 향후 원전 관련 또는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 감사에서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 과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원전 관련 또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감사의 객관성을 저해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감사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기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말씀하신 점을 유념하여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원고 측 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던 중, 피고 측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으로 위촉되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러한 '이해충돌' 이력이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감사원장직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지 않는지?

□ 원안위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소송대리인단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원안위 위원으로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안건을 회피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 이재명 정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여 행정부 내에서 행정조사를 병행하여 내란을 청산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운영 중인데, 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공감한다면 그 이유는?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후보자가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기준은?

□ 직무수행의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감사대상 선정부터 실시, 결과 처리까지 감사 전반에 있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며,

- 이를 관철시킬 확고한 의지와 역량, 그리고 내부 자정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 후보자의 과거 활동 이력이 감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 저의 과거 활동 이력이 감사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감사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기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의의 논의와 의결로 감사결과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 정권이 바뀌어도 감사 기준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한 입장은?

□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감사 기준은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데 동의합니다.

16. 과거 본인이 관여했던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면 제척·회피하겠다는 원칙은?

17. 원전·에너지 정책 감사에서 후보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울 의향은?

□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의 제척사항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정책감사 폐지 이후에도 감사원의 실질적 통제 기능은 유지된다고 보는지?

□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는,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당·부당을 따지거나 과도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부패·비리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9. 정책결정과 집행감사의 경계는?

□ “정책”은 강학상 개념 정의도 다양하고 실무상으로도 그 의미·범위가 불분명하나, 넓게 보면 정부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책결정”은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부 고유의 선택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정치적·가치판단적 영역이며

- “집행감사”는 결정된 정책 및 예산 등의 현장 집행에 관한 감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책결정과 집행감사의 경계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양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신중하게 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 후보자의 서초동 주택 전세금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5억 원으로 유지된 것이 사실인지?

21. 8년 가까이 전세금이 동일하게 유지된 사유는?

22. 전세계약 갱신 과정에서 전세금 증액·감액 없이 동일 금액이 유지된 계약 구조가 통상적이지 않은데 입장은?

23. 해당 전세계약이 일반 시장가격·시세 흐름과 비교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는데 입장은?

□ 해당 아파트는 장모 소유로 장인 간병을 위해 2017년 입주하였는데

○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8년간 장인 간병을 계속하였다는 점과 기존 거주 아파트를 처분하고 입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모가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 임대인(집주인)이 후보자와 특수관계인(친족·지인·업무상 이해관계자 등)이 아닌지?
25. 임대인과 후보자 사이에 과거 법률대리, 자문, 소송, 위원회 활동 등 직·간접 이해관계는?
26.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법인이 후보자 또는 후보자 소속 단체(민변 등)와 금전·법률·인사 관계는?
27. 전세계약 체결 및 갱신 과정에서 제3자(법무법인, 지인, 단체 관계자)의 개입이나 소개는?
28.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임대인이 감사대상 기관·감사 이해관계자와 연결될 가능성은?

□ 해당 아파트의 임대인은 장모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해관계 등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9. 감사원이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절차·책임’만 감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말씀하신 정책의 ‘방향’에 관한 감사는 정부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한 감사로 이해되며, 감사원은 최근 감사원 규칙을 개정하여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범위와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범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원법」에서 감사의 목적을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으로 규정된 점에 유의하여, 책임추궁보다는 그 성과·효율성 제고를 유도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최근 감사원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객관적 경위 및 사실관계의 확인 등 정보제공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감사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권 교체 뒤 감사 결과가 번복되는 상황에 대한 감사원의 책임은?

□ 과거 감사원에서 말씀하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운영하여

-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 내부 TF가 기존 감사 결과를 다시 뒤집는 구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조심스러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TF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런 우려가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 감사위원과 사무처의 권한·책임 구조를 손볼 의향은?

□ 현재 감사원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3. 감사원 인사·보직에서 정치적 오해를 차단할 장치를 만들 계획은?

□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4.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와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견해는?

□ 감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높은 수준의 자정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여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 과도한 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과도한 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향후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책임규명 감사보다는 성과 및 효율성 확보 감사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6. ‘공직사회 위축’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은?

□ 그간 감사원에서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제고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왔으나,

○ 일선 현장에서는 실패에 대한 사후 책임추궁 등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고, 이것이 공직사회의 적극적 업무처리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전컨설팅을 확대하고, 공직사회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늘려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 감사원의 권한만큼 책임을 강화할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이 국가 최고감사기구에 걸맞는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높은 수준의 자정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변호인 참여권 법제화, 디지털 포렌식 실시절차 강화 등 제도보완 노력에 더해,

- 수평적인 소통·협력이 활성화되도록 감사원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감찰 및 교육 등 감사문화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 감사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높은 수준의 자정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고, 감사원을 통제하는 별도의 외부기구를 둘 경우 옥상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9. 국회와 감사원의 관계를 ‘견제’, ‘협력’ 중 지향하는 바는?

□ 국회의 재정통제 등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감사원이 국회 의정활동 및 예·결산 심의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 국회의 정치적 요구로부터 감사원이 독립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치적 이슈는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감사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말씀하신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1. 언론·여론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내부 기준은?

□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만큼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 감사 결과 발표 시점과 방식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결과 발표 시점과 방식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3. 후보자가 보는 감사원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되면 ‘이전 정부 감사’와 ‘현 정부 감사’ 기준이 완전히 같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 감사원장 개인의 발언이 조직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장의 발언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46. 감사원장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47. 후보자 본인이 감사원 신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 제가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거나 특정 정권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제가 여러 정부에 걸쳐 다양한 국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항상 강조해왔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승아 위원님(더불어민주당)
서면질의서

1. 후보자가 생각하는 감사원의 주요 혁신과제는?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감사원의 자정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 확대”,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내부감찰·인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 아울러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극행정·기관간 갈등 해결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면책·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 「감사원 운영쇄신 TF」를 확인하였는지? TF에서 제시한 원운영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나,

○ TF에서 점검결과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통제 강화, 특별조사국 개편 필요성 등 여러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감사원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 3가지와 그 사유는?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이재명 정부 감사원 관련 국정과제 중 후보자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과제는? 그 이유는?

□ 국정과제 중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확대, 인권 친화적 감사 체계 구축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과 관련된 법령·제도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앞으로 주요 감사결과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감사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6. 월성 감사,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사드 감사, GP 감사, 관저 감사, 통계 감사 등 7대 감사 사항이 ‘정치·표적 감사’였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그간 제기된 비판에 대해 감사원이 TF를 구성해 점검하였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윤석열 정부 대상 감사들이 ‘봐주기 감사’,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그 이유는?

□ 후보자의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향후 주요 감사결과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감사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8. 감사원 '정치·표적·봐주기 감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복안은?

□ 정치·표적감사,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을 거치며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은 스스로 그동안 제기된 여러 비판을 돌아보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제시된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감사원 특수활동비 증빙 부실 및 오남용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방안이 있다면?

□ 국회·언론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구체적인 집행방식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고, 집행방식 개선 및 공개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10. 감사원에서 사무총장 주도로 감사가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문제의 개선 방안은?

11.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한 후보자의 복안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그간 제기된 비판에 대해 감사원이 TF를 구성해 점검하였고, 감사위원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후보자가 해온 사회적 활동 중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한 활동은?

□ 공익·인권변호사로서 그간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우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여러 진정사건 조사를 수행하며 억울하게 군에서 사망한 이들의 진실을 밝히는 데 역할을 하였고,

○ 청각장애인들의 공영방송 수화·자막 제공 의무를 인정한 가처분 신청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 또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툰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선변호인으로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인권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13. 후보자의 좌우명은?

□ 그간 종교 생활을 해오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14. 후보자가 생각하는 감사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은?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외압에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감사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 본인이 감사원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 지난 30여년 간 법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최대한 수행해 온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행정부 조직 운영 경험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직원들과 잘 소통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감사원 운영쇄신 TF」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TF를 구성해 정치보복 또는 감사결과 뒤집기를 하려한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후보자 지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조심스러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이 스스로 그동안 제기된 여러 비판을 돌아보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정치보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감사결과 뒤집기 비판과 관련해서는 TF가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점검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감사원 운영쇄신 TF」 구성·운영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나,

○ 감사원에서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근거하여 TF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 후보자가 생각하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로 우려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은?

□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가 잘못된 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중요 정책결정 당부에 한하여 감사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부패·비리 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9. 후보자가 생각하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의 적절한 운영 방안은?

□ 정부의 행정사무 대부분이 정책을 통해 수행되므로 이에 대한 감사는 불가피하나, 중요 정책결정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향후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추궁보다 정책의 성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되,

-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사익추구나 특혜제공 등 불법·부패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20. 감사원의 과도한 디지털 포렌식 실시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이 있다면?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 있어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내용 등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 최근 국회·언론 등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근거, 과도한 활용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 후보자가 생각하는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은?

□ 직무상 독립성은 감사대상 선정, 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 이를 관철시킬 확고한 의지와 역량, 그리고 내부 자정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 자신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하고

-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습니다.

22. 윤석열 정부 시기에 실시된 감사 가운데 부실·봐주기 감사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 직권 재심의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직권 재심의 등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23. AI디지털교과서 감사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시범운영 생략, 의견수렴 미실시, 기술기준 미비 등)가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지시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후보자께서는 기관에 대한 주의요구만으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24. 후보자께서는 AI디지털교과서 사안처럼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전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에서도 감사결과 주의요구에 그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25.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주의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데, 감사결과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위원회의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6. 적극행정을 장려하면서도 중대한 과실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AI디지털교과서 사안은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 사례에서 면책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 계획이신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행정 면책은 공직자가 공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알고 있고,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더불어민주당)
서면질의서

1. 감사원장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떠한 외압에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감사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란재판부 신설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국회 입법활동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위공직자 후보자 사전질문서 작성 요청을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 받았고, 이를 직접 제출했는지?

□ 후보자 검증 동의 요청은 11. 26. 인사비서관실로부터 유선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4. 후보자 및 배우자는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는지?

□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 본인 및 배우자는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 다만,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수사자료는 민감정보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 본인 및 배우자는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 다만,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재판자료는 민감정보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시비리,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 입시비리,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등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쪽 포함)이 농지, 임야, 잡종지 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한 적이 있는지?

□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쪽 포함) 등 농지 소유자가 농지 보유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 동안 직접 농작물을 재배했는지?

□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쪽 포함)이 주거용 건물(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오피스텔 등)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거주한 적이 있는지?

- '예'일 경우 해당 건물의 소재지, 취득일자, 면적, 취득목적, 보유기간, 실제 매입 매도 가액 등을 기재

□ 배우자가 2011. 4. 11. 서초에스알타워 오피스텔을 1억 9,000만 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임대 중에 있습니다.

건물 소재지	면적	취득일자	취득목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2-13 서초에스알타워 1102호	28.69㎡	2011. 4. 11.	임대수익 목적

11.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쪽 포함)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 또는 추진 중인 지역에 있는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지?

□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세금 감면 등(경제적 이득)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은 경우가 있는지, 그 이유는?

□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 있는지?

□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말 소득공제 시 자녀들은 모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4.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논문창작에 기여 없이 또는 기여한 범위를 넘어 저자로 표시한 적은 있는지?

□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 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험이 있는지?

□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 백화점 혹은 특급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는지?

□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 감사원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이 있다면?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제 자신부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감사원장 직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저를 포함해 감사원 직원 모두 이를 관철시킬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내부 자정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 약 30년의 법조인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3가지와 그 이유는?

□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여 어느 하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1997년 방송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방송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 변론에 참여하여 최초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 위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정책적·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2004년 국선변호사로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소송에 참여하여, 형식적인 진정함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인 진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 위 판결 이후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인도 소송의 당사자로서 공판 과정에서 진술 기회가 확대되는 등 피고인 권익보호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그 외에도 대한법협 인권위원회 TF 부단장 활동, 일본변호사협회 연대 구성 등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등을 위한 여론 조성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19. 본인이 감사원장에 임명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감사원장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 제가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유를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 지난 30여년 간 법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최대한 수행해 온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이 된다면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 타 부처 공무원들과 다르게 감사원 직원들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시 감사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이뤄지는 바, 이는 감사원의 특혜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감사원 징계절차 등에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은 2010년 7월부터 외부출신 감찰관을 임용하여 독립적으로 감사절차 준수 등 내부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과반 이상의 민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유념하여 내부통제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헌 위원님(더불어민주당)
서면질의서

1. 감사원장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외압에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감사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감사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장의 임기를 법률이 아닌 헌법(제9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장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직무상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원장 임기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4. 감사원 운영쇄신 TF가 제안한 특별조사국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특별조사국 운영 과정에서 비판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TF를 통해 점검한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특별조사국 업무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편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사무처가 감사위원회를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감사를 결정하는 구조를 어떻게 혁파할 것인지, 구체적인 직제 개편안 구상은?

□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에서 TF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감사에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감사위원회의의 통제 강화, 특별조사국 폐지 필요성 등 개선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감사원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 감사원 내 사조직 ‘타이거’에 대한 인적청산 및 보직 제한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지?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7. 감사원 내 사조직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으로 인한 파벌을 조성하여 직원 간에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직원 대상 행동강령 위반 사례 교육 등 예방적 감찰활동을 충실히 하고, 자체감찰 활동을 내실화하는 등 내부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8.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감사 전횡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김인회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TF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책임감 있는 자세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번 일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며 감사원을 이끌어 나가고 필요한 조치 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인사 전횡으로 좌천, 징계 등 피해를 받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구제 방안 마련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피해 본 직원이 있다면 구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0.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인사 전횡으로 망가진 공정 인사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계획은?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 운영 쇄신 T/F」 활동을 통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안보 기밀을 제외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그간 감사원은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 최근 감사원 소관 국회 상임위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보고할 수 있도록 감사원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제약하는 측면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더불어민주당)
서면질의서

1.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는 전임 정부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감사원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 감사를 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에서 TF를 구성해 점검한 결과 문제점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그러한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통계 감사와 관련해 정책적 판단과 견해 차이를 범죄로 몰아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수사 의뢰했음. 정책적 판단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감사원 행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전현희 위원장 감사는 임기가 보장된 전임 정부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 '근태 감사'라는 치졸한 방법을 동원했음. 결국 무혐의가 났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장이 된다면 감사원을 대표해 국민과 전현희 위원장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 김인회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TF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책임감 있는 자세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번 일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며 감사원을 이끌어 나가고, 개인의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침해나 표적감사 등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한상혁·KBS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방송 장악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며 방문진과 KBS 이사진을 찍어내기식 감사로 해임시켰음. 언론 자유를 침해한 이 감사들이 정당했다고 보는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이전하며 발생한 수많은 예산 낭비와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1년 8개월을 끌다가 맹탕 결론을 냈음. 최근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있는데,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처 방법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관저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 감사원은 꼬리 자르기로 덮었음.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잼버리 파행 국격이 추락한 잼버리 사태, 주무 부처인 여가부와 행안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겼음. 강약약강 감사로 보이는데 재 감사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잼버리 감사를 통해 전북도, 조직위, 여가부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책임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비위의 경중에 따라 형평에 맞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패싱하고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례가 빈번했음.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으로 보이는데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등 처분 의지는 있는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 운영쇄신 TF」 점검결과, 사무처의 감사위원회 패싱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9.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망신을 줬음. 이러한 수시보고와 언론플레이 관행에 대한 대책은?

□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하여 중간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수사요청 사실에 대한 중간발표 등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10. 감사원이 수천 명의 민간인 KTX/SRT 이용 내역을 무차별 수집했음. 이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로 보이는데 해당 정보를 수집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나

○ 감사원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를 거쳐, '23. 2월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고, 개인정보 및 감사 보안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개인정보 등 자료수집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발언을 했음. 감사원이 대통령의 하부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 후보자는 감사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감사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 독립된 감사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지난 2년 반 동안 무리한 정치 감사로 인해 감사원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음. 감사원 조직을 어떻게 추스를 것인지?

□ 감사원 조직을 지탱하는 것은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 복안은?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저 자신부터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특정 정치 성향(진보)을 대변해왔다는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민변 회장 출신이라고 해서 특정 정치 성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태어나 지금까지 본인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생각해본 적이 없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면 정치 성향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 과거 활동했던 단체(민변, 환경운동연합)와 관련된 사안 감사 시 회피/제척 신청을 할 의향이 있는지?

□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의 제척사항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역대 감사원장 중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과 그 이유는?

○ 한승헌 전 감사원장님께서 유머를 지니고 일관된 삶을 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 감사원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이유와 중도 사퇴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장의 임기를 법률이 아닌 헌법(제9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장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직무상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감사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할 견제 장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현재 감사원규칙 등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 의결 정족 수, 회의 진행 등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상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취지를 존중하며 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9.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수행한 감사 중 가장 잘된 감사 5개와 잘못된 감사를 5개씩을 꼽는다면?

□ 각각의 감사사항이 모두 국가 재정이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감사원이 '23년 시행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가 기억에 남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거나 친모에게 살해된 사실들이 확인된 감사입니다.

- 위 감사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전수조사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국회 통과까지 이어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위에서 과거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감사결과에 대해 그 잘잘못을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 간의 갈등 발생 시 조정 방안은?

□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상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취지를 존중하며 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 감사위원들과 감사원 사무처가 상호 소통·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 2022년 행안부 경찰국 신설 당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며 반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행정의 원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2.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 가장 아쉬웠던 점과 성과는?

□ 저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 수행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과거 환경운동연합 대표로서 월성·신한울 원전 반대 운동을 주도한 구체적 이유는?

□ 환경 관련 변호사로서 당시 원전 운영과 관련하여 최우선 가치인 국민의 안전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고려와 대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24.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 결과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평가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그간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와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들었고, 특히 공직사회가 정책 추진 시 사후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와 본인의 과거 신념이 충돌할 경우, 감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위장전입 이력이 단 한 차례라도 있는지?

□ 그간 가족 모두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위장전입 이력은 없습니다.

27. 법무법인 한결 재직 시 수임했던 사건 중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내역은?

□ 과거 수임했던 사건이 다수인 관계로 정확한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고액 수임료 논란 및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입장은?(수임료 내역 제출 요구)

□ 통상적인 수준 대비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저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 자녀의 입시 및 취업 과정에서 부모의 지위나 인맥이 활용된 적은 없는지?

□ 자녀들은 본인의 전공과 능력 등을 살려 각각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고, 취업 과정에서 부모의 지위나 인맥이 활용된 적은 없습니다.

30. 본인 및 아들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 특혜나 청탁은 없었는지?

□ 저는 육군 법무관(중위)으로, 자녀들은 각각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하였는바, 병역 이행 과정에서 특혜나 청탁은 없었습니다.

31. 과거 세금(소득세, 증여세 등) 체납 사실 및 사유는?

□ 후보자, 배우자 및 자녀의 국세·지방세 체납액은 없습니다.

32. 보유 주식 중 직무 연관성이 있는 종목의 백지신탁 계획은?

□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의 보유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이해충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3.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기타 5대 인사 검증 기준 위반 사항은 없는지?

□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활성화 방안은?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최근 공무원이 각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추진 시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신기술·신산업 등 불확실성이 높은 고난도 업무에 대한 면책요건을 과감히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35.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타파를 위해 감사원이 징계 위주 감사에서 벗어날 방안은?

□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타파를 위해 감사원이 징계 위주 감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간 감사원에서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제고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왔으나,

- 일선 현장에서는 실패에 대한 사후 책임추궁 등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고, 이것이 공직사회의 적극적 업무처리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사전컨설팅을 확대하고, 공직사회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늘려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 자체 감사 기구(각 부처 감사관실)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은?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인사 및 업무 등에서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37. 윤석열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통계에 대해 감사원이 1년여간 감사를 진행했음. 검찰은 재판에서 감사원의 압박·불법 감사 정황이 드러나자 다음 재판에서 통계 '조작'이 아닌 '수정' 사건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 있어 관련 감사결과 및 공판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알지 못하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재판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 부동산 통계 감사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모두 재심의를 신청했음. 이후 진행 절차와 재심의 신청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감사원의 재심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감사원의 처분요구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감사의 중요한 이의제기 절차로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재심의 청구사항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개혁신당)

서면질의서

1. 감사원장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떠한 외압에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감사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감사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추진할 과제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확대하고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확대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감사원(장)의 임기, 지위, 소속 등 모든 것 포함)

□ 직무상 독립성은 감사대상 선정, 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 이를 관철시킬 확고한 의지와 역량, 그리고 내부 자정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의 소속과 지위, 감사원장의 인사권 등도 감사수행의 독립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후보자는 현 감사원이 대통령 및 기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독립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감사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위원님께서는 정치의 감사화, 감사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감사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최근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을 개정하여

○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범위와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범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의 행정사무 대부분이 정책을 통해 수행되므로 이에 대한 감사는 불가피하지만,

- 정책결정에 대한 사후적으로 당·부당을 따지거나 관련된 책임 추궁이 과도할 경우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6, 감사원은 대통령 및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 감사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통령으로부터 위법·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감사의 적절성 감사 결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 시절 감사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그간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와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들었고, 특히 공직사회가 정책 추진 시 사후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인류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자력 발전에 대한 후보자 개인의 견해는?

□ 감사원장 후보자의 신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 탈원전 성향을 가진 후보자가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경력으로 국민적 우려(이해충돌, 정치적 성향 등)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0. 감사원이 이전에 행한 감사의 적절성을 감사원이 다시 검토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조심스러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감사원이 스스로 그동안의 제기된 여러 비판을 돌아보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에 대해서는 TF가 점검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높은 수준의 자정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국정감사 등 감사원에 대한 통제·감시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투명해야할 감사원에서 기재부 기준 및 지침과는 다른 특활비 사용으로, 매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특활비 필요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후보자 견해

□ 국회·언론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구체적인 집행방식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고, 집행방식 개선 및 공개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13. 최재해 전임 원장의 국회 탄핵 소추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14. 최재해 전임 원장 탄핵안 법원 기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전임 원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으로 최종 판단을 하였고, 이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감사원장 후보자 신분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후보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가장 큰 업적(탈원전 제외)

□ 공익·인권변호사로서 그간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우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여러 진정사건 조사를 수행하며 억울하게 군에서 사망한 이들의 진실을 밝히는 데 역할을 하였고,

○ 청각장애인들의 공영방송 수화·자막 제공 의무를 인정한 가처분 신청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 또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툰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선변호인으로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인권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16. 후보자가 생각하는 소신과 정치적 편향성 차이에 대한 견해

□ 감사원장은 개인적 견해와 무관하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소신과 의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어떠한 외압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감사원의 책무를 소신껏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